

참여정부의 국정비전

## 동북아경제중심의 비전과 과제

2003년 12월 17일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www.nabh.go.kr](http://www.nabh.go.kr)

이제 우리의 미래는 한반도에 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동북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 세계의 변방에 머물던 동북아가, 이제 세계 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떠올랐습니다. 21세기는 동북아 시대가 될 것이라는 세계 석학들의 예측이 착착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경제규모는 세계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한·중·일 3국에만 유럽연합의 네 배가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지난날에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급 두뇌와 창의력, 세계 일류의 정보화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과 고속철도 등 하늘과 바다와 땅의 물류기반도 구비해 가고 있습니다.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 나갈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동북아의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동북아 시대는 경제에서 출발합니다. 동북아에 '번영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번영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평화의 공동체'로 발전해야 합니다. 지금의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질서가 동북아에도 구축되게 하는 것이 저의 오랜 꿈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동북아 시대는 완성됩니다. 그런 날이 가까워지도록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2003. 2.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의비전과과제]를 펴내며

안녕하십니까?

참여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한국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허브로 발전시키자는 동북아경제중심건설 사업을 추진한지 어느덧 8개월이 되었습니다. 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로 구성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발족하여 동북아경제중심 구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 간 상호조정과 협력 등을 통해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을 지원하는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그 동안 본 위원회의 홈페이지([www.nabh.go.kr](http://www.nabh.go.kr))를 통해 동북아경제중심추진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드렸습디만, 그 정보의 양이나 깊이가 충분하지 않았습디다. 이에 본 위원회의 사업진행 상황, 그간의 성과 및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담아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책자는 동북아경제중심추진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5개 영역으로 나누어 동북아 협력(평화축진을 위한 동북아 SOC 건설, 동북아 공동체 형성축진), 물류중심지 전략추진, 동북아 금융중심 추진, 창조형 국가혁신체제 구축, 전략적 외국인투자 등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사례나 뚜렷한 성과가 발생한 것은 아님디지만, 내년 상반기 정도면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결과들이 나올 예정이므로 차후에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동북아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동북아의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거대 시장과 자원의 공급지를 두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북아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과거 고통만을 주었던 지정학적 위치가 희망의 조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추진 사업은 이렇게 격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여건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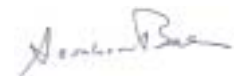
수립된 국가 전략입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그 동안 준비해온 마스터플랜이 구체화된 첫해로서 전체 계획의 장기적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책자가 동북아경제중심추진 사업과 관련된 기타 정책 및 사업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지침서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동북아경제중심추진 사업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추진과정 중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체적인 국가간 경제협력 추진과제에 관한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주셔서 한국이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 성장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소중한 정책 제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이런 작은 관심과 성원이 동북아경제중심추진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의 고견과 지적을 참조하여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12월 17일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장 배순훈



# 목 차

## 제 1 장 : 동북아 구상과 동북아경제중심추진

- I. 동북아구상의비전과 전략-----7
  - 1. 평화와번영의동북아구상
  - 2. 동북아경제중심추진의 의미와 과제
  - 3. 동북아경제중심추진 체계

## 제 2 장 : 동북아경제중심추진 사업의 주요 과제

- II. 동북아협력-----16
  - 1. 동북아협력구상이란?
  - 2. 동북아협력구상의추진방향
  - 3. 주요추진과제
  
- III. 물류중심지로의 발전-----31
  - 1. 왜 물류중심지인가?
  - 2. 물류중심지로의 발전 가능성
  - 3. 물류중심의 비전과 발전전략
  - 4. 세계최고수준의 공항, 항만 개발
  - 5. 7대 세부추진과제
  - 6. 물류중심전략의 추진일정과 추진체계

IV.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중심지로의 도약-----41

1. 금융중심의 정의 및 유형
2. 동북아 금융중심 추진 배경
3. 동북아 금융중심 추진 전략
4.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체계

V. 창조형 국가혁신체제(NIS) 구축-----52

1. 왜 창조형 국가혁신체제를 말하는가?
2.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의 성과와 한계
3. 창조형 국가혁신체제의 목표와 전략
4. 혁신 클러스터 사업의 추진 일정과 추진 체계

VI. 전략적 외국인 투자-----63

1. 전략적 투자유치의 필요성
2.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의 개념
3.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의 추진 일정과 추진 체계
4. 외국인 투자유치 종합 대책

VII. 맺음말-----75

## 1. 동북아 구상의 비전과 전략

1.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구상

2.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의 의미와 과제

3.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체계

## 1.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구상

### 국가 전략으로서의 동북아 구상

동북아는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정치·군사적 갈등으로 인해 경제적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긴장상태를 유지해 왔다. 특히 19세기 이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중·일전쟁과 2차 대전,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으며 동북아의 역사는 대립과 불신으로 점철되었다.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의 한복판에 한반도가 있었다.

그러나 동북아는 이제 대립과 불신의 역사를 극복하고 세계경제의 주역으로서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미-소 양극체제가 붕괴되고 옛 사회주의권의 체제전환이 진전됨에 따라 동북아는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으로 도약할 역사적 기회를 포착하고 있다. 전세계 대비 동북아지역의 총생산비중은 2000년 21%에서 2020년에는 30%로 증가할 전망이고, 동북아지역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미국과 유럽의 최종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다. 초국적기업의 연구·개발·생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또, 중국의 동북3성 지역, 러시아의 극동지역, 몽골, 북한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여 동북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 결과 동북아 국가들간의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주요국들의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은 싱가포르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연계협정)를 체결하였고 한국과 2003년 12월부터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하는 등 과거와는 달리 지역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ASEAN은 2010년 중국과 FTA 체결을 목표로 중국의 경제발전예 따른 과실을 조기수확하려 하고 있다. 중국도 전략적인 관점에서 이에 호응하여 2004년부터 ASEAN 상품 중 600개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를 일방적으로 감면 또는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홍콩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상하이의 급부상으로 인해 ‘중국의 관문’ 기능이 약화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생명공학 등 첨단분야를 육성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려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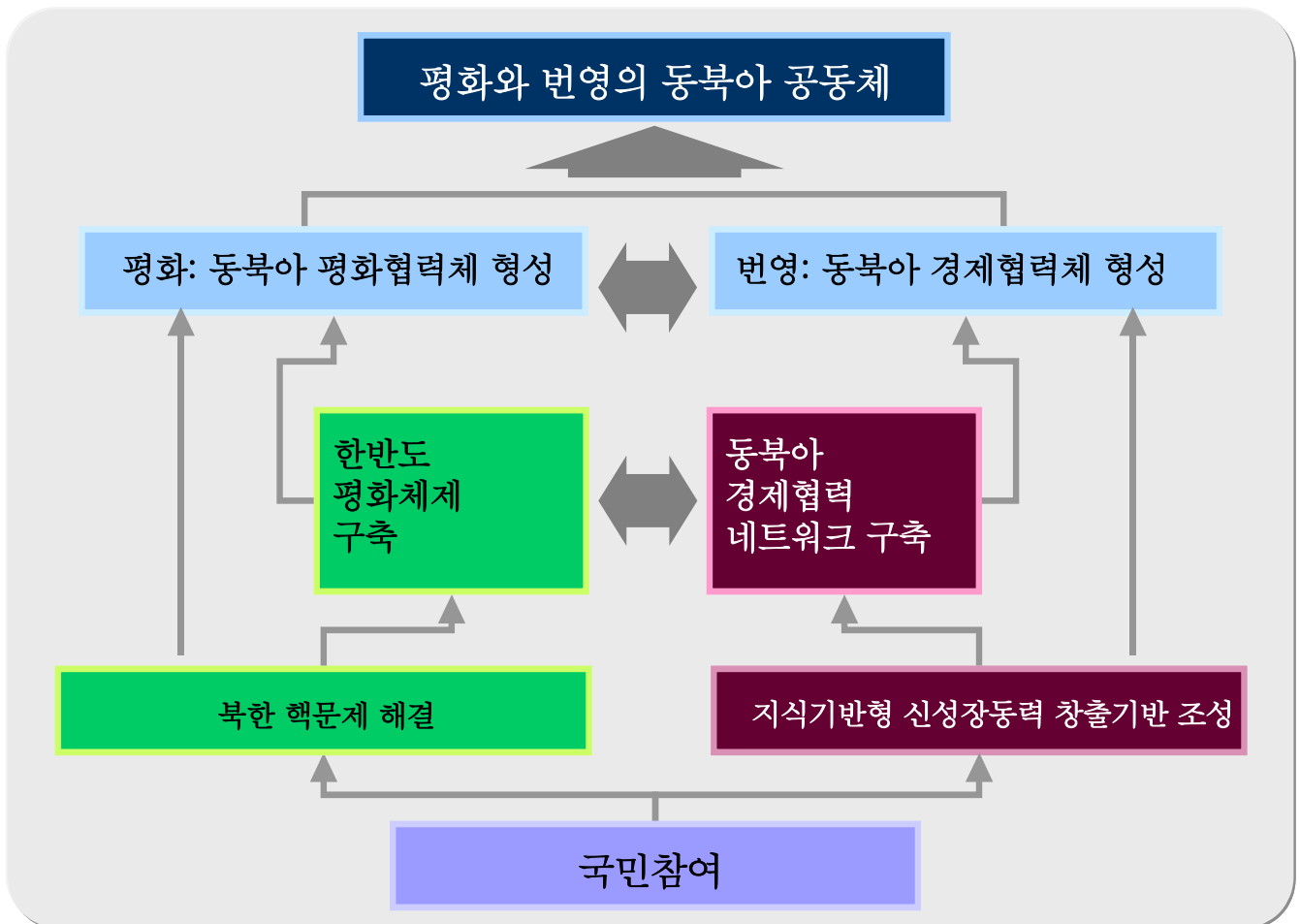
이러한 정치·경제적 격변의 한가운데에서 동북아지역의 공동번영 없이는 우리경제도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하기 어려우며 우리 경제의 미래는 동북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여정부의 동북아 구상은, 미-소 양극체제의 와해와 중국의 급부상으로 격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통해 우리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수립된 국가전략이다.



## 정치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확대의 선순환구조 확립

철학적으로 볼 때 동북아 구상은 경제교류를 통해 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칸트의 평화사상과 연결되어 있다. 최근 동북아지역에도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나 동서 냉전체제 와해 이후 자본주의화의 길을 걷고 있는 동구국가들에 비해 동북아지역의 평화기반은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동구국가들과는 달리 지역안보에 대한 조약이나 협의체가 없음은 물론 아직 사회주의 체제를 고집하고 있는 북한이 동북아의 한가운데 있다. 또한 한·중·일 삼국간에도 과거역사에 대해 완전히 청산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특히, 중·일간에는 이러한 잠재적인 적대감이 경쟁의식과 함께 내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동북아 지역이 이러한 상호불신과 반목을 극복하고 진정한 동반자관계를 형성할 때 세계경제의 명실상부한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1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구상



## 2.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의 의미와 과제

###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시장의 주도적 구축

동북아 구상의 기저에 깔린 발상은 정치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를 건설해 나간다는 것이다.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이란 이러한 평화와 공동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가는데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계기를 마련해 나가는 한편, 그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려는 것이다.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세계 주요기업이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북아를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단 국가간에 정치적 돌파구가 마련되면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관계개선에도모하고, 동북아 국가들만을 위한 배타적 공동체 대신 세계 각국의 주요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동북아에 만든다는 것이다. 동북아 국가들만을 위한 지역협력보다는 미국·유럽 등 역외 지역에서 동북아에 진출한 기업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역외 국가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테니스 대회에 비유하자면 자국선수들끼리만 겨루는 국내대회가 아니라 US 오픈처럼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참여하는 국제대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축구에서 예를 찾자면 2002 한·일 월드컵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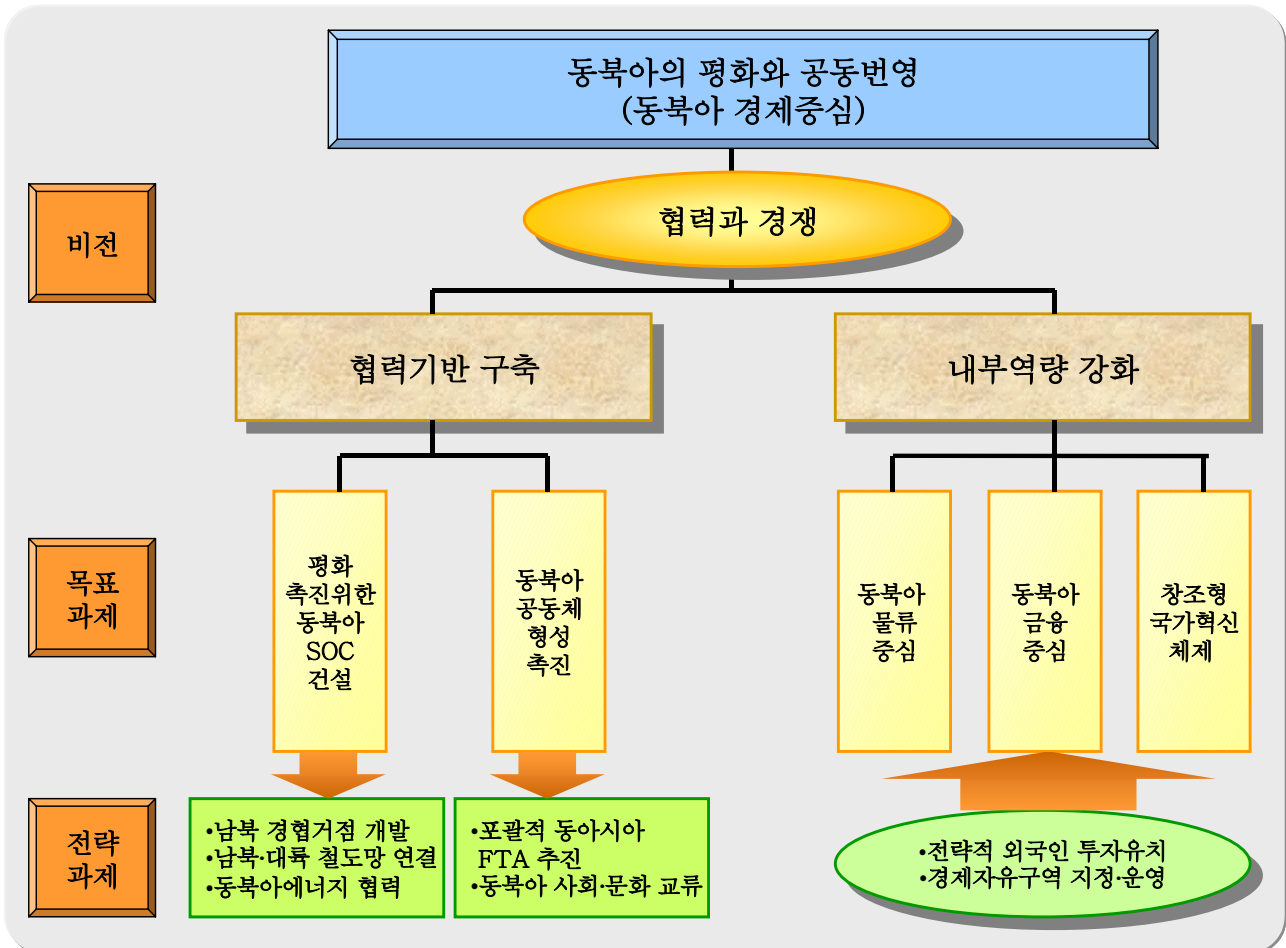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겠다는 의미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패권주의적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정립구도 면에서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는 점과 동북아 평화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문제의 한 당사자인 점을 자각하고 동북아 공동번영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場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상호 협력의 기틀 위에서 각국의 강점을 살려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통해 상호보완할 수 있는 차별화전략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상생의 길을 걷도록 해야 한다.

### 대외협력 강화 및 내부역량 제고

동북아경제중심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를 적극 활용하여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의 내부역량을 제고하여 경제중심지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 해야한다. 대내적인 기반이 탄탄해야

대외적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대외관계의 개선이 국가위협도를 낮출 것이므로, 이 두 가지 과제는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 그림 2 > 동북아경제중심 구상도



① 평화촉진을 위한 동북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대외적인 과제는 동북아를 가로지르는 에너지·수송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시장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자원부국인 러시아와 에너지 다소비국인 중국, 일본, 한국을 가스·석유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함으로써 호혜적인 관계를 공고히 하고, ‘철의 실크로드’ 등 포괄적인 수송네트워크를 건설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역내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고립된 상태에서는 동북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조속히 북한을 동북아 협력체제 속으로 끌어들이어야 한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중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 ② 동북아 공동체 형성 촉진

또, 세계경제의 블록화 현상에 대응하여 한·중·일이 중심이 되고 ASEAN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추진하되, 이와 같은 역내 경제통합이 세계 경제통합의 디딤돌로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국가간 제도격차 및 농산물시장 개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우선 포괄적인 한·일 FTA를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FTA를 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역내 국가들과 협력하여 풀어나갈 협의의 틀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제통합의 기반이 될 동북아 사회문화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 이 같은 사회문화교류를 통해 역내 국가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동북아 국가로서의 공동체인식을 제고한다. 특히 문화산업, 관광산업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물류허브기능 강화

먼저 인천공항과 부산·광양항은 국제적인 간선항로에 위치해 있고, 인접국 도시·항만과의 연계망도 잘 발달되어 있어 현재도 일정수준 동북아 물류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공항·항만의 수용능력을 더욱 확충하고 배후부지를 개발하여 포장·조립·가공 등 부가가치 물류 활동을 촉진시켜 동북아 물류허브기능을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공항을 건설하는 것 외에도 국제 경쟁력을 가진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고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세계 유수의 물류기업과 함께 우리기업 인력도 동북아 물류허브의 주역이 되도록 하는 한편 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물류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국내외 물류기업들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시설투자배분 조정을 통해 도로부문에 편중된 SOC 투자를 철도·항만으로 돌리는 한편,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하여 동북아 철도망 연결 사업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 ④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우리나라는 금융하부구조의 취약, 금융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금융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여건은 열악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물 경제나 금융시장 규모면에서 아시아 2~3위를 다투고 있고 특히 자산운용 수요와 구조조정 등 동북아 특화금융수요의 잠재역량이 풍부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발전을 모색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우리가 금융허브를 추진하는 이유는 금융산업은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제조업 등 실물부문의 경쟁력을 촉진시켜 우리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올려 놓음으로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견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집중육성하고 주식·채권·외환 등 기존 금융시장을 선진화 하며 구조조정 등 동북아 특화수요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동북아 투자공사를 설립하여 역내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제도적·환경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오는 2007년까지 기반구축, 2012년에 특화금융허브 완성 그리고 2020년에는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⑤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창조형 국가혁신체제 구축

이와 함께 제조업을 첨단화하고 전략적 외자유치를 통해 우리의 취약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클러스터(Cluster)를 형성하고 이를 국제분업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경학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중국시장 진출의 시험장이나 거점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중국에서 가공될 중간재를 공급하고 중국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개발·수출하는 한편, 증가하는 물동량에서 파생되는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등 IT 분야에서는 중국 연안지역에 신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한국에서 먼저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보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발전에 자극을 받아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미래에 대해 회의를 표시하고 서비스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남북한 합쳐 인구 7,000만 명으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을 포기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1,000만 명도 되지 않는 홍콩,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을 벤치마크로 삼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오히려 서비스업의 잠재력에 주목하면서도 제조업의 저력을 인정하고, 정부가 특정 산업부문을 겨냥하기보다는 민간기업이 각 산업부문에서 자기책임의 원칙 하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일 것이다.

\* 클러스터(Cluster): 클러스터는 전·후방 연계 관계에 있는 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 지식생산조직 및 기업관련 협회 등 연계·지원기관의 집적과 네트워킹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한 지역을 의미한다.

### ⑥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

우리나라는 그 동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을 시행, 금융, 자본, 부동산, M&A 시장 등을 대폭 개방하였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투자인센티브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외국인투자는 주로 공장신설형투자보다는 M&A형 투자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 제조업, R&D센터, 아시아지역본부 등 거점형 투자유치는 부진하였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의 다양한 순기능을 발휘시킬 수 있는 시점에서 양적 기반하에 질적 효과를 제고시키는 새로운 외국인투자정책의 틀인 ‘전략적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이에 외국인투자 유치전략과 대책을 마련하여 외국인투자유치 추진체제 및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제 강화, 투자인센티브 보강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우리 경제 실태에 부합하는 전략적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외국인 친화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기업 경영 및 외국인 생활환경을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전국적으로 외국인 친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과 병행하여 특정 지역을 설정하고 이 지역 내에서는 교육, 의료, 언어, 방송 등 외국인이 경영·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경제부 산하에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설치하고 공항·항만 등 물류기반이 갖추어진 인천·부산·광양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외국인투자유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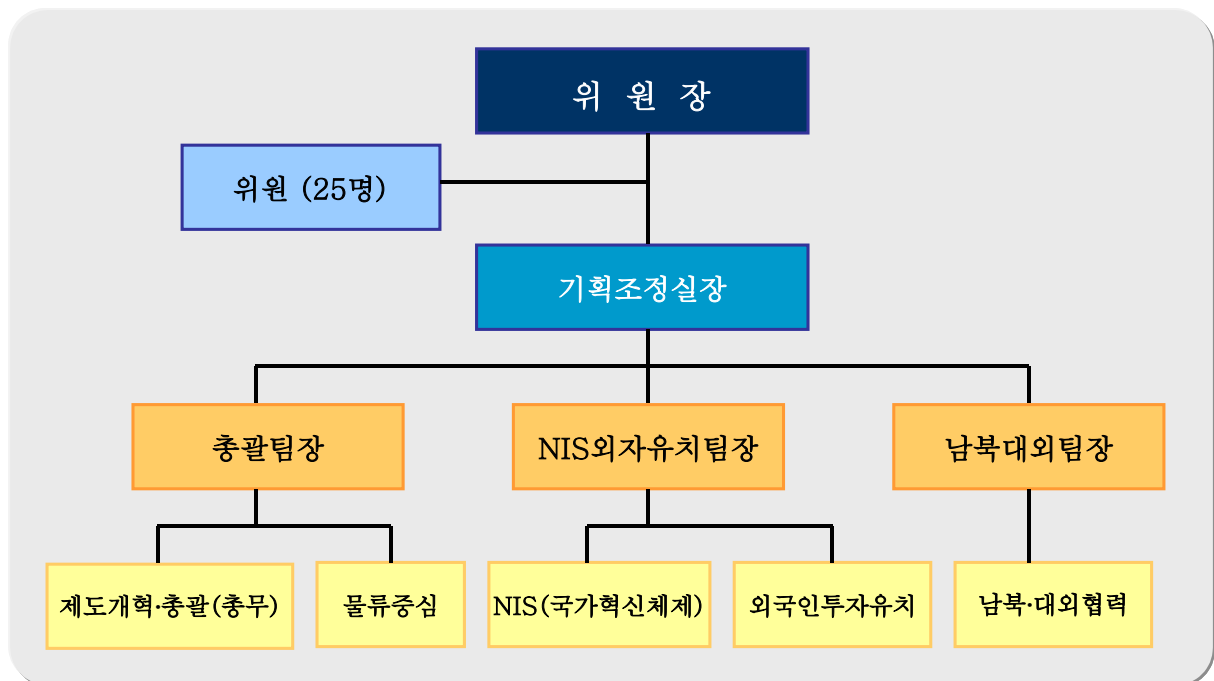
## 3.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체제

참여정부는 이러한 동북아 구상 및 동북아경제중심을 추진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로 2003년 4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크게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위원회는 대통령령에 의거해 위원장 1인, 민간위원 14명과 장관급 정부위원 11명 등 25명으로 구성되어 동북아경제중심실현의 전략 및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위원회는 제도개혁, 국가혁신체제, 외국인투자유치, 물류중심, 남북·대외협력 등 5개로 구성하여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위한 과제를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체계를 토대로 향후 관련부처 등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수립·집행한다.

< 그림 3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기구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연혁>

- 2003. 4. 7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 17955호) 공포 및 시행
- 2003. 4. 16 위원장 및 위원위촉
- 2003. 4. 29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현판식 및 제1차 위원회 개최
- 2003. 5. 2 국정과제회의
  - 동북아경제중심 실현의 기본방향
  - 클러스터에 기초한 경제발전 전략
- 2003. 5. 9 제2차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개최
- 2003. 5. 21 민간위원 워크숍 개최
- 2003. 5. 23 제3차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개최
- 2003. 6. 5 국정과제회의
  - 새로운 외국인투자유치전략 : 방향과 과제
- 2003. 6. 13 제4차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개최
- 2003. 6. 20 제5차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개최
- 2003. 6. 26 유럽상공회의소와 국제세미나 공동주최
  - 지역협력과 비즈니스 허브 : 유럽의 사례와 교훈
- 2003. 7. 18 제6차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개최
- 2003. 7. 25 제7차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개최
- 2003. 7. 30 국정과제회의
  - 동북아 대외협력 구상
  - 동북아 신국제분업과 한국의 전략
- 2003. 8. 22 제8차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개최
- 2003. 8. 27 국정과제회의
  -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 및 광양항 활성화 방향
- 2003.10. 7 제9차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개최
- 2003.10. 16 국정과제회의
  -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 2003.11. 14 제10차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개최
- 2003.11. 20 국정과제회의
  - 남북·대륙철도 연계 방안
- 2003.12. 11 국정과제회의
  -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전략



## II. 동북아 협력

1. 동북아 협력구상이란?
2. 동북아 협력구상의 추진방향
3. 주요 추진과제

## 1. 동북아 협력 구상이란?

냉전시대가 종식된 이후 동북아지역에서도 국가들간의 상호 역학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내 경제지도도 급변하고 있다. 동북아 협력구상은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우리나라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의 구현을 촉진하고 주도하기 위해 착안되었다. 한편으로는 에너지·환경·과학기술 등 기존의 역내 국가간 협의 채널을 정비하여 동북아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을 통한 ‘번영’을 지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평화협력체를 형성함으로써 역내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구상은 서유럽의 공동번영 경험에서 시사점을 얻은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슈만플랜(Schuman Plan)’을 통하여 전통적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전쟁 없는 유럽을 만드는데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당시 대표적 군수 물자였던 석탄과 철강을 초국가적으로 관리하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1952년 창설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유럽연합을 태동시킨 내적 동인이 되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은 유럽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결속시켜야 할 필요에 따라 서유럽부흥을 위한 원조계획인 ‘마셜플랜(Marshall Plan)’을 시행하였다. 즉 슈만플랜과 마셜플랜은 공통적으로 정치적 목적과 경제부흥을 연결시킨 지역협력 전략이라 할 수 있다.

\* 슈만플랜(Schuman Plan) :1950년 프랑스 외무장관 R.슈만이 구상한 독일·프랑스의 석탄·철강 공동관리 계획으로 이 계획이 발표되자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이탈리아 등이 가입,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조약이 조인되고, 1952년 정식 발족하였다.

\*마셜플랜(Marshall Plan) :정식 이름은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으로 이 계획을 제안했던 미국의 국무장관 마셜(George Catlett Marshall)의 이름을 따서 마셜플랜으로 명명됨. 마셜플랜은 1947년 6월 유럽에 대한 경제원조 계획을 제안했고 이것이 파리회의에서 승인되어 1951년 말까지 서유럽 16개국에 114억불의 원조가 제공되었다.

동북아 협력 구상은 안보와 밀접히 연관된 분야의 경제협력을 통해 역내국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수만 플랜을 원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 자체적인 경제개발능력이 취약한 역내 낙후지역을 개발을 촉진하여 동북아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마샬 플랜을 원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서유럽의 역사적 경험을 동북아에 적용하여 냉전체제의 유산이 아직도 남아있는 동북아 지역에 상호 신뢰와 협력을 정착시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 동북아 협력구상의 취지이다. 동북아 협력구상은 이런 측면에서, 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 평화를 조성하는데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역내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② 무역자유화 등을 통해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면서 ③ 국제협력을 통해 역내 낙후지역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 2. 동북아 협력구상의 추진방향

### 동북아 협력구상 3원칙

동북아 협력구상은 3가지 원칙 하에서 추진될 것이다.

첫째, 평화지향 원칙이다. 평화 없이는 번영이 있을 수 없으므로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번영의 토대가 될 역내 평화정착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 또한 역내 평화는 한반도의 평화 없이는 달성될 수 없으므로 동북아 지역협력과 남북협력관계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추진하여 북한을 점진적인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고자 한다.

둘째, 호혜주의 원칙이다. 역내 타국의 희생 위에 일방적인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국가간 상호의존에 따른 이득을 극대화하여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관련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분야를 발굴, 추진할 것이다.

셋째, 열린 지역주의 원칙이다. 동북아 지역의 협력을 추구하는 경우에도 동북아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역내외 모든 국가가 협력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미국과 EU 등 전통우방과의 관계도 계속 중시할 것이다. 또한, 역외 다국적기업이 동북아 지역에서 규모의 경제를 향유하면서 경제행위를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 동북아 협력구상 중점 추진방향

동북아 협력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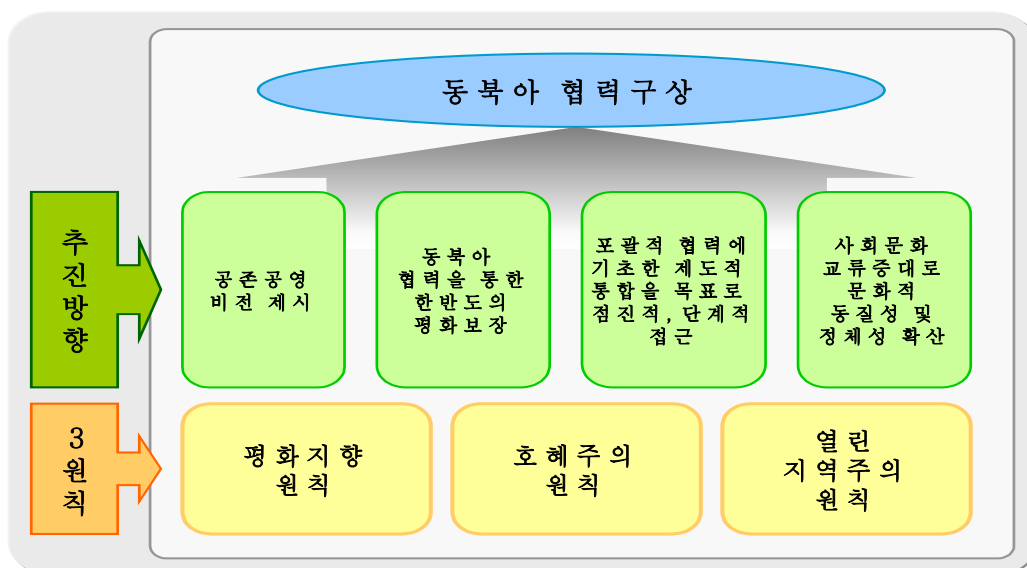
첫째, 우리나라가 동북아 국가들의 공존공영을 위한 협력에 리더십을 발휘하여, 평화와 번영을 위한 비전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함께 추진할 구체적 사업을 제안할 것이다. 또한 오랜 역사를 통하여 동북아에 전개된 패권의 역사를 협력의 역사로 전환하기 위한 우리의 비전에 공감하는 협력적 이웃을 만들어 나가고 동참시켜 나갈 것이다.

둘째, 동북아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없이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실현될 수 없으므로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시대 구현의 선결과제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 동북아 경제협력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북아 경제협력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북아 협력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는 체제가 서로 다르고 발전단계가 다른 여러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포괄적 협력에 기초한 제도적 통합을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실현가능한 분야의 부문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넷째, 사회문화 교류 증대를 통해 동북아 공동의 문화가치를 개발·공유하고 문화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인적교류 확대와 동북아인으로서의 공동체의식 형성은 동북아에서의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다.

< 그림 4 > 동북아 협력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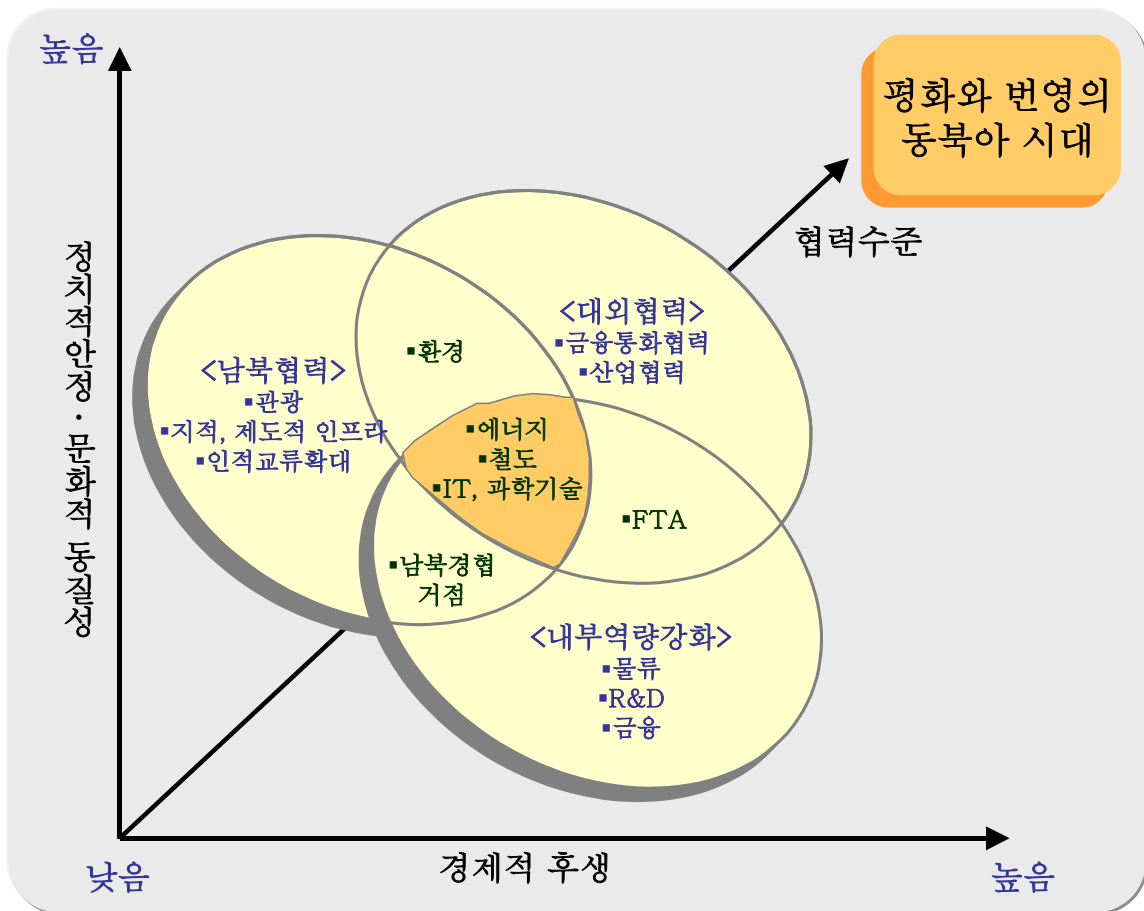


### 3. 주요 추진과제

동북아 구상은 경제적, 문화적 유대 강화를 통한 상호의존성 증대가 역내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역내 국가간의 교류와 협력의 확대를 통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후생 증대가 선순환되는 동북아 질서를 지향한다.

<그림 5>는 동북아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3개 영역은 내부역량 강화, 남북협력, 대외협력을 각각 의미하는데, 과거 이들은 각기 별도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동북아 구상에서는 이들의 공통부분을 찾아내고 그 영역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동북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바로 이 공통부분이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하는 출발점이며, 이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이 이러한 선순환구조의 심화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이 3개 영역의 공통부분이 확대될수록, 협력의 수준이 심화될수록, 동북아의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동질성이 제고되는 동시에 경제적 후생도 증대되어 궁극적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가 구현되는 것이다.

< 그림 5 > 동북아 시대 구현을 위한 청사진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① 개성공단, 금강산 특구 등 남북경협 거점 개발사업, 남북·대륙철도망 연결 및 연계, 동북아 에너지 협력사업, 정보통신·과학기술 협력 등 평화와 연관된 분야의 사회간접자본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②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 환경협력, 사회문화교류 등 동북아 공동체 형성추진과 관련된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떠오르게 된다.

**< 표 1 > 동북아 협력 사업**

주요 사업		사업 내용
평화와 연계된 동북아 사회간접 자본 건설	남북경협거점 개발	개성, 금강산 등 남북경협의 주요 거점 개발 및 확산
	남북·대륙 철도망 연결	남북간 철도운송 개시, 대륙간 철도와의 연계 추진
	동북아 에너지 협력	천연가스 개발협력, 에너지협력기구 발족 추진 등
	정보통신· 과학기술협력	남북 및 동북아 통신 협력 및 과학기술 협력 강화
	역내개발 재원 마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개발 금융협의회 설립 추진
동북아 공동체 형성 추진	동아시아 FTA 추진	한·일 FTA 체결, 한·중·일 FTA, 동아시아 FTA 지향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	역내 환율 안정성 및 유동성 제고, 동아시아 금융 협력체 형성 촉진
	동북아 환경협력	월경성 환경오염문제 협력, 환경협력체 추진
	동북아 사회 문화교류	역내국간 화해·평화 도모, 정체성 및 동질 성 회복

### 평화와 연계된 동북아 SOC 네트워크 건설

#### ① 남북경협 거점 개발 및 확산

우리나라가 역내 협력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절된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공간을 복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을 동북아경제협력 네트워크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을 동북아경제협력의 틀 안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체제 및 관리방식의 개혁과 효율성 증대를 통한 북한경제의 체질강화가 선행되고, 더불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대외개방의 확대가 필요하다. 남북경협은 북한경제의 내부개혁과 대외개방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며, 거시적으로는 동북아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남북경협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통해 우리 경제가 동북아경제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무형의 자산을 제공한다.

남북경협은 북한이 특구중심의 경제개방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지역을 거점으로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북한 내 경협거점은 앞으로 북한경제의 현대화작업을 선도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남북경제의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아울러 북한 내 경협거점의 확산을 통한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남북경제의 격차를 해소시켜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남북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게 된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특구를 우선 개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동해·서해 양축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축을 형성해 나간다. 양축의 연결을 통해 남북경협축은 자연스럽게 한반도와 동북아를 연결하는 축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남북경협 거점개발 사업은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하되,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원마련과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기업 등 국제사회의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 ② 남북한 철도연결 및 동북아 철도망 연계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 공사를 가급적 조기에 완료한 이후 남북간 소규모 운송으로부터 시작하여 북한철도 현대화를 통해 대륙철도와의 연계운행을 추진해 나간다. 분단경제의 현실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단절된 남북간 철도이다. 따라서 남북한 철도연결은 경제적 효과 뿐 아니라, 북한 통과구간의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분단으로 인해 끊어진 민족의 혈맥이 복원된다는 역사적 의의도 간과할 수 없다.

< 그림 6 > 남북철도(TKR)와 연계 가능한 대륙철도노선



남북철도(TKR)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의 대륙철도와 연결되면 기차로 부산을 출발하여 서울, 평양을 거쳐 러시아나 중국대륙을 횡단해 유럽으로 향하는 꿈도 실현 가능하다. 남북철도와 대륙철도의 연결은 우리의 지정학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고 동북아의 물류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북핵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북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대륙철도와 안정적인 연계운행을 위해 노후화된 북한철도 구간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 철도시설의 현대화 정도, 대륙철도 노선 각각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북한지역 철도 현대화는 철도노선, 현대화 수준여하에 따라 소요 재원이 상이하므로 정밀한 비용·편익 분석이 필수적이다.

국제협력 측면에서 관련국 정부 및 철도건설·운영·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동북아 철도협의체 구성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와 북한 철도의 현대화 방안 등 대륙철도와의 연계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관련 국가와 긴밀한 협력 하에 추진해 나갈 것이다.



### ③ 동북아 에너지 협력

우리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가 대단히 취약한 실정이므로 미래의 안정적 에너지원의 확보가 시급하다. 동북아지역은 대규모 공급처(러시아)와 대규모 수요처(한·중·일)가 근접하고 있어서 역내국가가 서로 협력하지 않는 경우 에너지 확보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우려된다. 다행히 냉전 종식 이후 역내 에너지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에너지협력체를 구축하여 에너지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에너지 협력문제는 안보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만큼 △경제성(매장량, 공급량, 수송경로, 가격결정원칙) 뿐 아니라 △에너지안보(안정적 공급원 확보) △대외관계(관계국간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기여정도) △환경(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협력의 구체적인 분야로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망 구축, 원유 수입·비축 협력, LNG 수입, 전력 연계망 구축, 에너지 자원 탐사·개발 및 에너지관련 기술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협력효과 및 관련국의 이해관계 측면에서 볼 때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망의 구축 및 원유 수입·비축에서의 협력이 우선협력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망의 구축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소비지까지 운송하는 수송망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와 도입선 다변화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원유 수입·비축에서의 협력은 기존 원유저장시설의 공동이용 확대와 수입에서의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에너지공급 협력, 지역 에너지의 개발이용 확대, 시베리아와 연해주 지역의 수력자원 개발 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에너지협력에 따르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동북아 에너지 협력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에너지 협력의 기본원칙, 국가간 수송 및 교역, 기술협력, 환경보전, 분쟁해결 절차 등을 포함하는 헌장과 조약 체결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현재 양자 또는 복수국간 진행 중인 에너지 협력 논의 채널을 에너지 공급국과 소비국 전체를 포괄하는 지역내 다자간 협의체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정보통신(IT)·과학기술 협력

정보통신(IT)과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동북아협력은 세계적 수준에 이른 우리의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의 협력강화는 물류·금융 등 여타 관련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도 크므로 이를 기폭제로 타 분야로의 협력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동북아 IT 및 과학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한·중·일 3국간에 운영 중인 실무급 회의를 격상하여 정부간 고위급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동아시아 인터넷 기업연합, 과학기술 포럼 등 민간차원에서의 협력체 결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협력 체계를 활용하여 동북아 국가간 IT·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즉 IT 핵심기술분야 표준화, 초고속망 공동구축,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역내 물류 정보망 구축 통합 추진 등의 사업이 검토될 수 있다. 또한 관련분야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교류, 인력교류 프로그램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한간에도 정보통신 표준화,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교육훈련 등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⑤ 역내개발 자원조달 방안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 연안지역은 성공적인 공업화를 수행하여 북미, EU와 함께 세계경제 3대 축의 하나를 형성하고 있지만, 아직도 동북아 지역에는 낙후지역이 많이 있다. 지역 내 경제적 격차가 클수록 그만큼 장기적인 공동체 형성이 어렵다. 따라서 동북아 협력의 중요한 요소는 낙후지역 개발을 지원하여 역내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여 공동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예상되는 막대한 자금의 대부분은 국제사회의 공적자금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개발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존 국제기구의 동북아지역 투·융자 액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경우, 1998~2002년 동안 일반재원 투·융자 승인액 중 24.8% 미만이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양허적 성격을 갖는 아시아개발기금(ADF)의 경우 불과 2.4%만이 동북아지역에 할당되었다.

제한된 재원이거나 기존의 국제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북아 국가의 개발금융기관들을 통한 자원조달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최근 한국산업은행, 중국개발은행, 그리고 일본 미즈호 은행은 가칭 ‘동북아시아개발금융협의체’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고무적이다.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지원하고, 북한이 연계된 인프라 개발사업이 주요 프로젝트로 제안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개발·추진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민간기업과 국제개발 금융기관이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채권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아시아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나 동북아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담당할 별도의 지역개발은행(예컨대 가칭 ‘동북아개발은행’)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을 통한 낙후지역의 경제개발은 동북아의 정치적 안정과 역내경제통합을 위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은행의 설립에는 일부 주요국들의 소극적 태도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있음에 비추어 제반여건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동북아 공동체 형성 촉진 사업

### ① 자유무역협정(FTA)의 적극 추진

자유무역협정(FTA)은 성장잠재력이 큰 동북아시아 지역의 교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역내 성장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심수단이다. 이는 높은 수출의존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또한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외부적 계기로도 필요하다.

FTA를 통해 역내시장이 자유화되면 국내시장이 그만큼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FTA는 무역증대라는 ‘정태적 효과’뿐 아니라, 규모의 경제, 경쟁심화에 따른 생산성 증대, 국내 구조조정 및 구조개혁 촉진, 국내외 투자 증대라는 보다 중요한 ‘동태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이유로 FTA 추진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대외협력의 제도화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의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에 부합된다.

동북아 구상의 맥락에서 FTA 체결 대상국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무역·투자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적 이익과 국내적인 개방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지역안보 강화라는 정치·외교적 동기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면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10월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FTA 체결 교섭을 합의함에 따라 2003년 12월에 본격적인 협상이 개시되었다. 따라서 협상과 병행하여 일본과의 FTA 체결에 대비한 종합 국내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한·중 FTA, 한·중·일 FTA, 한·ASEAN FTA 등의 추진문제는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FTA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모색의 관점에서 그 체결효과, 국내적 제약요인, 관련국의 FTA 추진동향, 상대국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다.

\*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 FTA란 지역무역협정(RTA)의 가장 낮은 단계로서, 계약국간에 상품교역에 대한 교역장벽을 철폐하여 시장접근성을 증대시키는 협정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에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무역규범 및 제반 경제정책의 조화까지도 포함시켜 경제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FTA’ 체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FTA가 RTA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1950년 이후 2003년 5월까지 WTO에 통보된 RTA 발효건수는 153개에 이르나, 이 중 83%는 1990년대 이후 발효된 것으로, FTA 체결이 세계적 조류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 ② 금융통화협력

최근 동아시아 각국에서 외환위기의 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역내 통화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엔-달러 환율변동에 따른 역내통화의 환율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급격한 자본 유출입의 충격을 흡수하면서 안정적인 국제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역내 통화·금융협력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아시아는 세계 외환보유고의 절반을 넘는 막대한 역내국의 외환보유고와 높은 저축에 기초한 역내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를 역외에 투자한 뒤 다시 역내로 환류시킬 필요 없이 역내에서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일본 주도로 제안되었던 아시아 통화기금(AMF) 구상은 아시아 국가들의 호응에도 불구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및 주요국들의 반대로 인해 결실을 보지 못했다. 2000년 5월 동아시아 지역의 유동성 지원장치로서 통화스왑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치앙마이 구상(CMI: Chinang Mai Initiative)은 역내 금융협력 강화를 향한 중요한 일보였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로서 환율 안정, 유동성 지원장치 확충, 독립적인 감독체제 구축 등을 위해 역내 금융통화협력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장기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역내교역 및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상호 경제적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역내 통화협력체제의 궁극적인 지향점에 대한 국가간 합의도 있어야 한다. 또한, IMF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기존 국제통화기구와의 협력관계 설정도 필요하다. 이를 염두에 두고, 단기적으로는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서로 다른 정치경제적 상황에 있음을 감안하여 역내 통화사용 증대, 역내 결제제도 협력, 역내 금융감독 강화, 역내 자본시장 형성 등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협력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치앙마이구상(CMI : Chinang Mai Initiative) :치앙마이구상은 통화교환(스왑)협정으로 2000년 5월 타이 치앙마이에서 열린 ‘아세안+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처음 제안 되었다. 역내 각국 통화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협정으로 한 나라의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정 규모의 달러를 빌려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외환위기에 대응한 일종의 안전판인 셈이다.

### ③ 환경협력

지구환경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한 이후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은 경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황사, 산성비 등 월경성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역내 고도 경제성장 추세 및 빈번한 유류이동 수요에 따른 해양오염 증가 위협에 직면하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도 공동협력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에 반해 동북아 지역에서는 환경협력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환경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제도적 장치 미비 등으로 인해 협력의 수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시민사회와 주민들의 점증하는 요구를 점점 더 외면하기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유연한 형태의 협력을 추구하면서 기존 환경협력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보다 구속력을 갖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협력형태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역내 국가간 교량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력 및 시민사회 성숙도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동북아 환경협력에 있어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 ④ 사회문화교류

동북아의 상호이해 증진과 신뢰회복을 위해 역내 국가 및 단체간의 사회문화교류를 통한 인적교류가 필요하다. 이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정서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동북아시아는 주민들의 생활양식 속에 문화적 유사성을 많이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를 동북아 차원에서 재해석하고 공동의 가치와 의식을 찾아냄으로써 동북아 역내국간의 대립과 갈등의 불행한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다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NGO 단체들, 다양한 전문가 그룹, 시민사회 일반, 각종 이익집단 및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간다. 특히 동북아의 사회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21세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문화 및 관광산업의 역내국가간 협력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먼저,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동북아 지역국가들의 문화산업협력을 통하여 상호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번영을 지향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아시아 문화콘텐츠 공동제작센터 조성, 아시아 문화교류 센터설립 등을 추진한다.

관광산업적 측면에서는 역내 국가간 관광산업 협력강화를 위해 국외적으로는 동북아 역내 관광비자 도입, 관광패스 개발, 관광자원 정보화, 문화관광 교류전 추진, 청소년 문화관광 교류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국내적으로는 안내표지판 정비,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 확충 등의 안내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관광은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적 체험을 통한 상호이해증진 등 문화적 기능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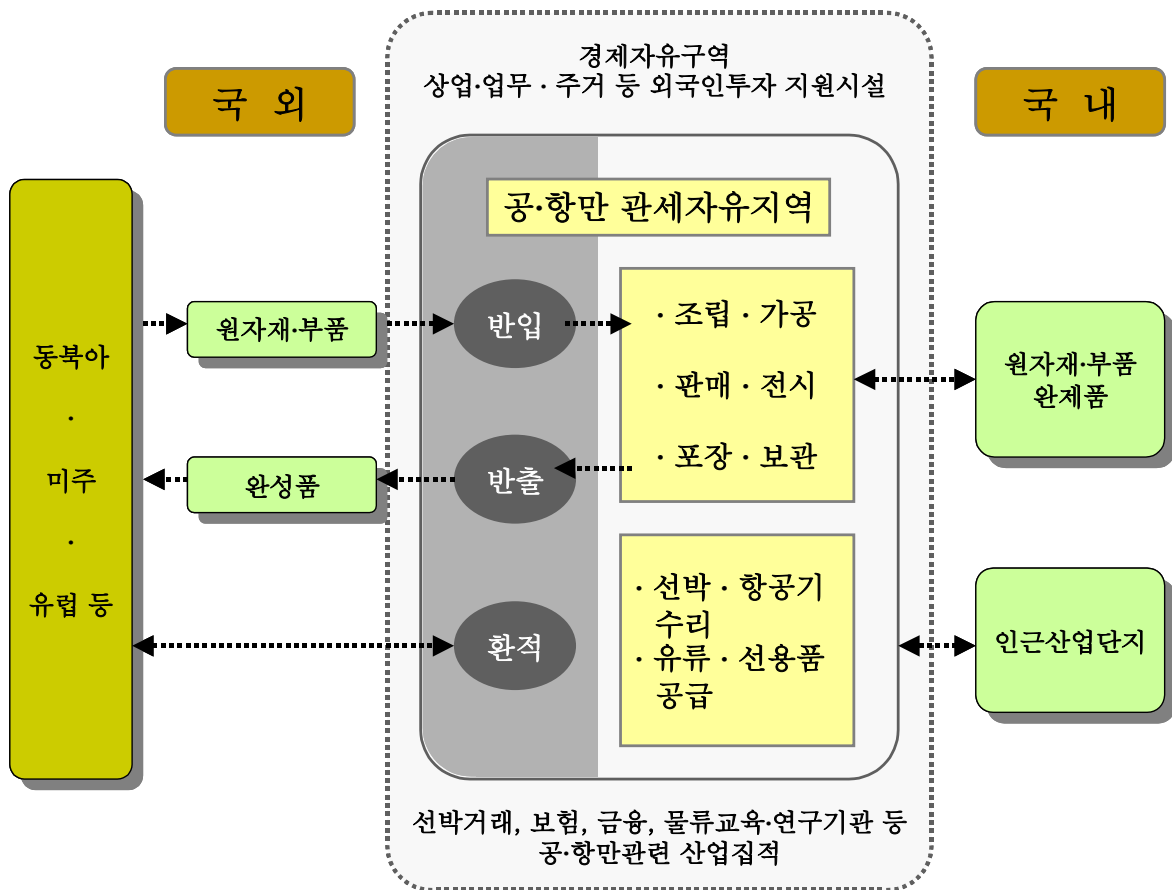
### Ⅲ.물류중심지로의 발전

1. 왜 물류중심지인가?
2. 물류중심지로의 발전가능성
3. 물류중심의 비전과 발전전략
4. 세계 최고수준의 공항, 항만 개발
5. 7대 세부추진과제
6. 물류중심전략의 추진일정과 추진체계

# 1. 왜 물류중심지인가?

물류중심지는 지역경제권을 연결하는 글로벌 물류시스템에서 주변지역에 물류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지로, 동북아물류중심지는 글로벌물류의 동북아센터(본부) 또는 동북아의 관문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적 기업이 동북아 지역본부나 물류센터를 우리나라의 공항이나 항만 배후 물류단지에 설립하고 국내외에서 원자재, 주요 부품, 완성품을 조달하여 제조, 조립, 가공, 포장, 라벨링 등의 부가가치 물류서비스(Value Added Logistics)를 하여 동북아 전 지역으로 완성품을 공급하는 거점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림 7 > 물류중심의 개념도



따라서 우리의 인천공항, 부산항·광양항이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발전하게 되면 물류산업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관광산업 등 관련산업의 연쇄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세계화기업의 판매센터, 서비스센터, 콜 센터, R&D 센터, 비즈니스 본부, 제조기능까지도 유치할 수 있다.

석학 Paul Kennedy 교수는 '21세기에 한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의 흡수효과가 가장 큰 산업부문을 전략산업으로 채택·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물류가 바로 그러한 전략산업중의 하나이며, 중국이 창출하는 기회와 가능성이 가장 큰 부문과 지역을 전략적으로 채택,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 2. 물류중심지로의 발전가능성

국내의 물류산업은 아직 잘 발달하지 않았지만 국제물류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한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의 남부지역은 전 세계적인 간선항로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공항과 부산항·광양항, 인천항 등의 항만을 통한 동북아 운송네트워크의 확대는 동북아역내 항만·공항들과의 연계성을 크게 제고시키고 있다.

### 물류중심지로의 항공운송 상황

항공운송부문에서, 우리나라의 항공화물은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아시아지역과 북미, 유럽지역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국적항공사들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2001년 187만톤의 항공화물을 처리하여 세계 6위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북미와 중국, 동남아 등을 연계하는 환적물동량의 비중이 47%에 달하여 항공화물의 허브화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천공항은 지역 내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국적항공사의 역할과 더불어 동북아와 뉴욕간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입지조건(인천 11,000km, 홍콩 13,000km, 싱가포르 15,000km)과 3.5시간이내의 비행거리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51개나 되어 거대한 배후지역을 가지고 있어 많은 화물을 유치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2002년 현재 52개의 항공사가 취항하여 117개 도시를 연계하고 있는데, 국적항공사들은 특히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이나 중국의 항공사들에 비해 월등히 많은 노선과 운항회수로 경쟁력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국적항공사들은 특히 북미와 동남아지역간의 항공화물을 많이 유치하여 높은 운송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재의 항공기로는 여객이나 화물을 충분히 싣고 동남아에서 북미 동부까지 논스톱으로 비행할 수 없는 기술적인 제약요인과 더불어 국적사들이 동아시아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연계하는 우수한 항공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 물류중심지로의 해운운송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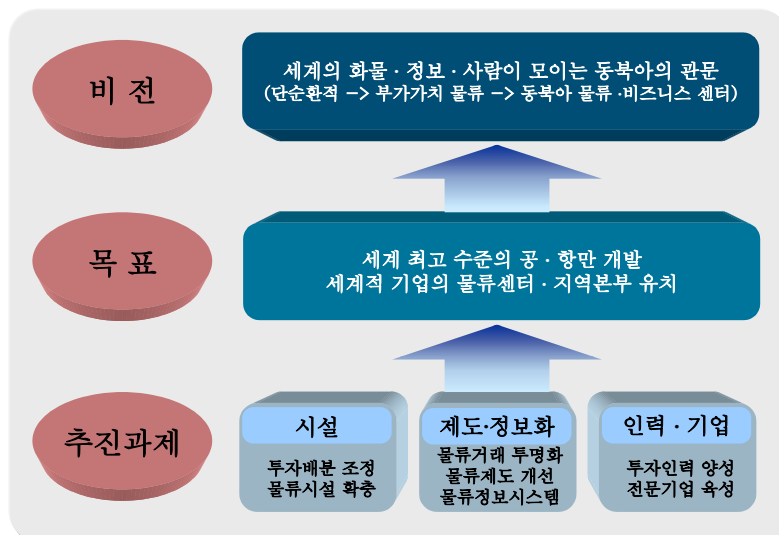
해운부문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가별 컨테이너 처리량에 있어서는 세계 6위이다.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은 2002년 943만 TEU를 처리하여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3위의 컨테이너 처리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90년대 이후 연평균 13.0%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특히 중국 동북부지역과 일본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환적화물이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하는데, 2011년에는 환적물동량이 전체화물의 44.4%인 13백만 TEU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우리 항만이 동북아에서 중심항만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본과 중국 등 주변지역으로부터 환적화물이 증가하는 이유는 부산항을 통하여 수송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대형선사들에 의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물류중심지로서의 발전가능성은 이렇게 항공과 해운부문에서 이미 상당한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 3. 물류중심의 비전과 발전전략

정부는 인천공항과 부산항·광양항, 그리고 그 배후지를 '세계의 화물과 정보, 사람이 모이는 동북아의 관문'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공항과 항만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화물은 그대로, 또는 배후지에서 조립·가공·포장 등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아져 다시 동북아 각지로 배송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센터, 관광, 금융 등 연관 국제비즈니스도 활발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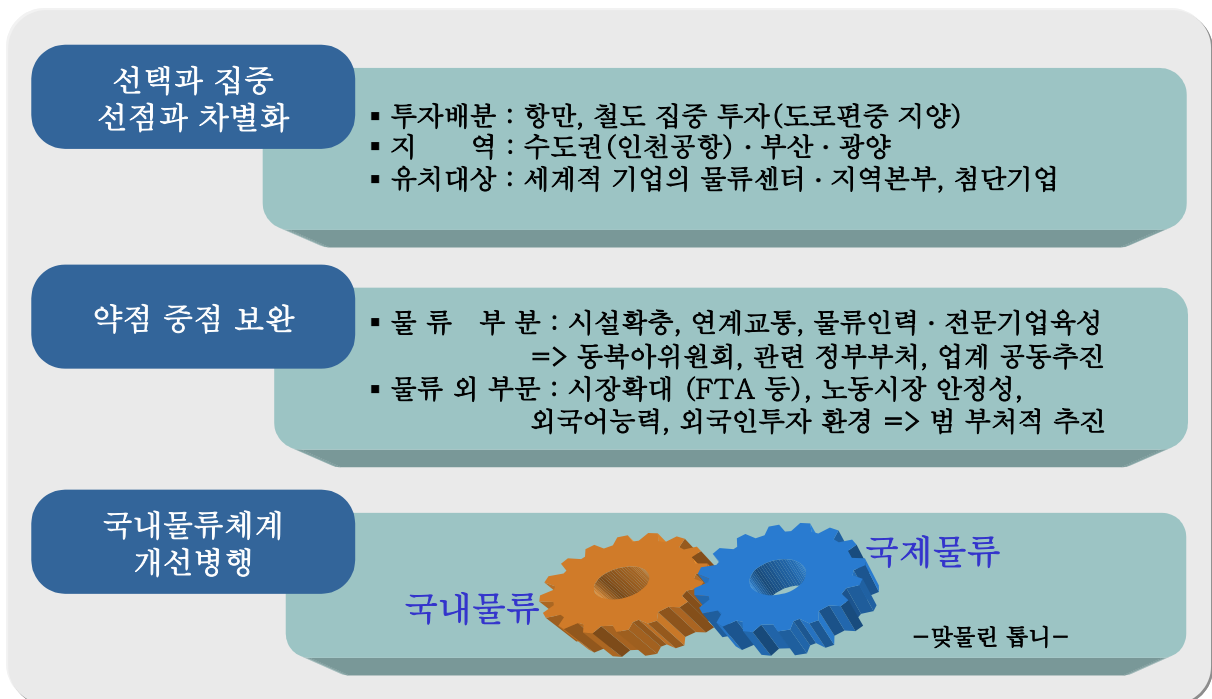
< 그림 8 > 물류중심의 비전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수준의 공항, 항만과 배후단지를 개발하여, 세계적 기업의 물류센터와 지역본부를 유치함은 물론 물류관련제도와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세계적 물류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물류전문기업도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물류중심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정부는 ‘선택과 집중, 선점과 차별화’, ‘약점의 중점보완’, 그리고 ‘국내물류체계의 개선 병행’이라는 전략하에 세계최고수준의 공항·항만 개발과 7대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추진하고 있다.

< 그림 9 > 물류중심지로의 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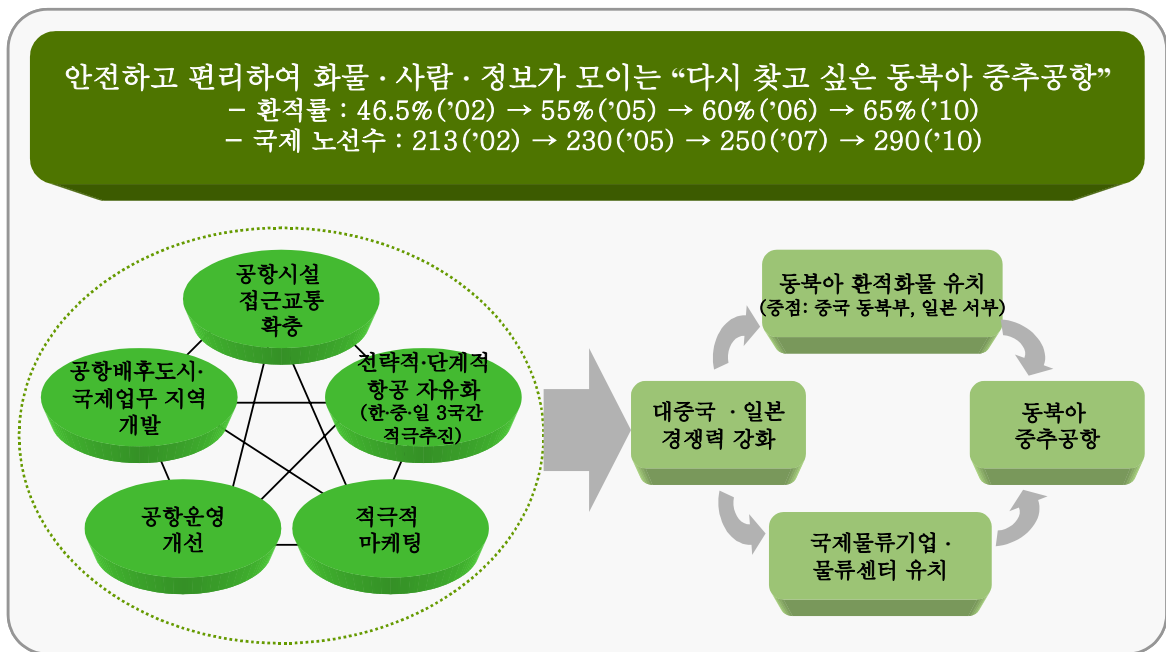
#### 4. 세계 최고수준의 공항, 항만 개발

물류중심지의 목표는 선진외국의 자본과 기업 및 기술을 직접투자의 형태로 유치함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표는 특히 유럽 및 미주 다국적기업들의 지역물류센터, 지역본부, 콜 센터 등을 유치하는 것으로 달성될 수 있다. 물류중심지의 발전유형을 살펴보면, 세계화 기업들의 지역거점단위 물류센터 통합과 지연생산전략이라는 물류전략에 따라 지역별로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가 생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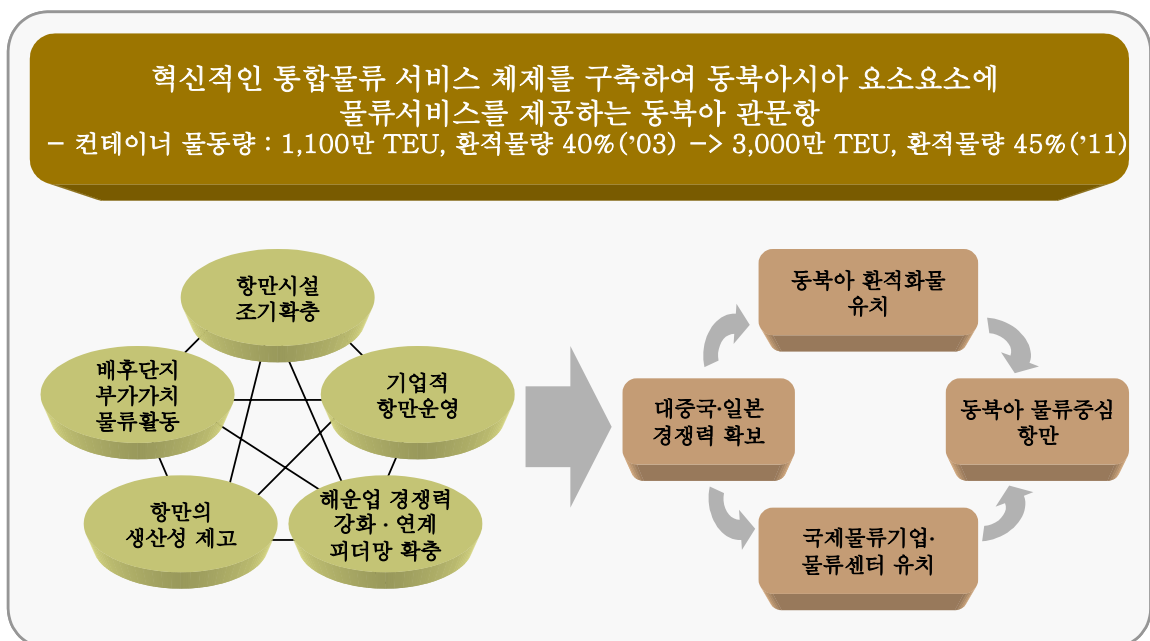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나라가 물류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공항·항만 등 물류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우리의 공항, 항만과 동북아의 주요 도시를 신속하고 높은 밀도로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만 가지고는 현재와 같이 화물의 단순 환적처리만 가능하고 재고관리, 조립, 혼합, 부품추가, 상표부착, 품질검사, 재포장 등과 같은 보다 큰 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공항과 항만의 배후지역에는 기업들이 부가가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조성하여 이들 기업들의 동북아지역 물류센터를 유치하여야 한다.

< 그림 10 > 중추공항의 비전



< 그림 11 > 중추항만의 비전



## 5. 7대 세부추진과제

공항, 항만, 그리고 배후단지의 개발 이외에도 ① 교통시설 투자배분 조정, ② 국제경쟁력을 가진 물류전문기업 육성, ③ 물류거래 투명화, ④ 물류인력 양성, ⑤ 국제물류지원제도개선 및 물류기업유치, ⑥ 막힘없고, 서류없는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그리고 ⑦ 동북아철도망 구축과 같은 물류기반의 차원을 높이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 ① 교통시설 투자배분 조정

먼저, 부족한 교통·물류SOC 확충을 위해서는 그 동안 도로부분에 편중된 SOC 투자를 지양하고 대량교통수단인 철도와 연안해송의 수송분담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통시설 투자배분을 대폭 조정하여 항만과 철도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계획이다.

※ 유럽의 예 : 철도투자액(1,885유로)이 도로투자액(818유로)의 2.3배

### ② 국제경쟁력을 가진 물류전문기업 육성

둘째로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선진화하는 등 국제경쟁력을 가진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화물자동차 개별등록제를 조기 시행하여 지입제를 폐지하고 공정거래 차원에서 다단계 주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물류업체의 대형화와 종합화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물류업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영세물류업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개별차주의 화물확보 지원을 위하여 우수업체 인증제도, 화물직거래 정보화 등을 지원하고, 운송거부와 같은 물류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송관련법에 「업무복귀 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③ 물류거래 투명화

셋째, 물류거래 투명화를 위하여 신용카드결제 인센티브를 제고하고, 3자 물류기업 이용확산을 통한 거래투명화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 ④ 물류인력 양성

넷째, 물류인력양성을 위하여, 부산, 인천, 광양 등 주요 물류도시의 대학을 물류특성화 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외국의 우수 물류교육기관과 연계하여 물류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국제물류활동을 펼칠 고급물류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연수원을 항만기능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을 추진하여 공항과 항만 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에 따라 필요한 기능인력을 적기에 양성할 계획이다.

### ⑤ 제물류 지원제도 개선 및 물류기업유치

또한 국제물류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국제물류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관세자유지역법과 자유무역지역법을 통합·보완하고, 통관절차를 물류흐름 위주로 전면 개편하며, One-stop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의 바탕 위에 2개 이상의 국제특송업체와 세계유수의 제조기업 및 물류기업의 동북아물류센터를 본격적으로 유치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 ⑥ 막힘없고, 서류없는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기존 공항, 항만 등의 물류정보망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물류거점별·주체별로 분리되어 있는 정보망을 통합하며, 금융·보험·해외물류망과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 ⑦ 동북아철도망 구축

마지막으로, 향후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경우에 대비하여 동북아철도망 구축사업도 동북아 국가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동북아국가 공동으로 「동북아철도구축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각국의 철도 건설·운영·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동북아 철도협의체」를 구성한 후 동북아철도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동북아철도망이 구축되면 우리 경제의 배후권역이 동북아·유라시아로 확대될 것이다.

## 6. 물류중심전략의 추진일정과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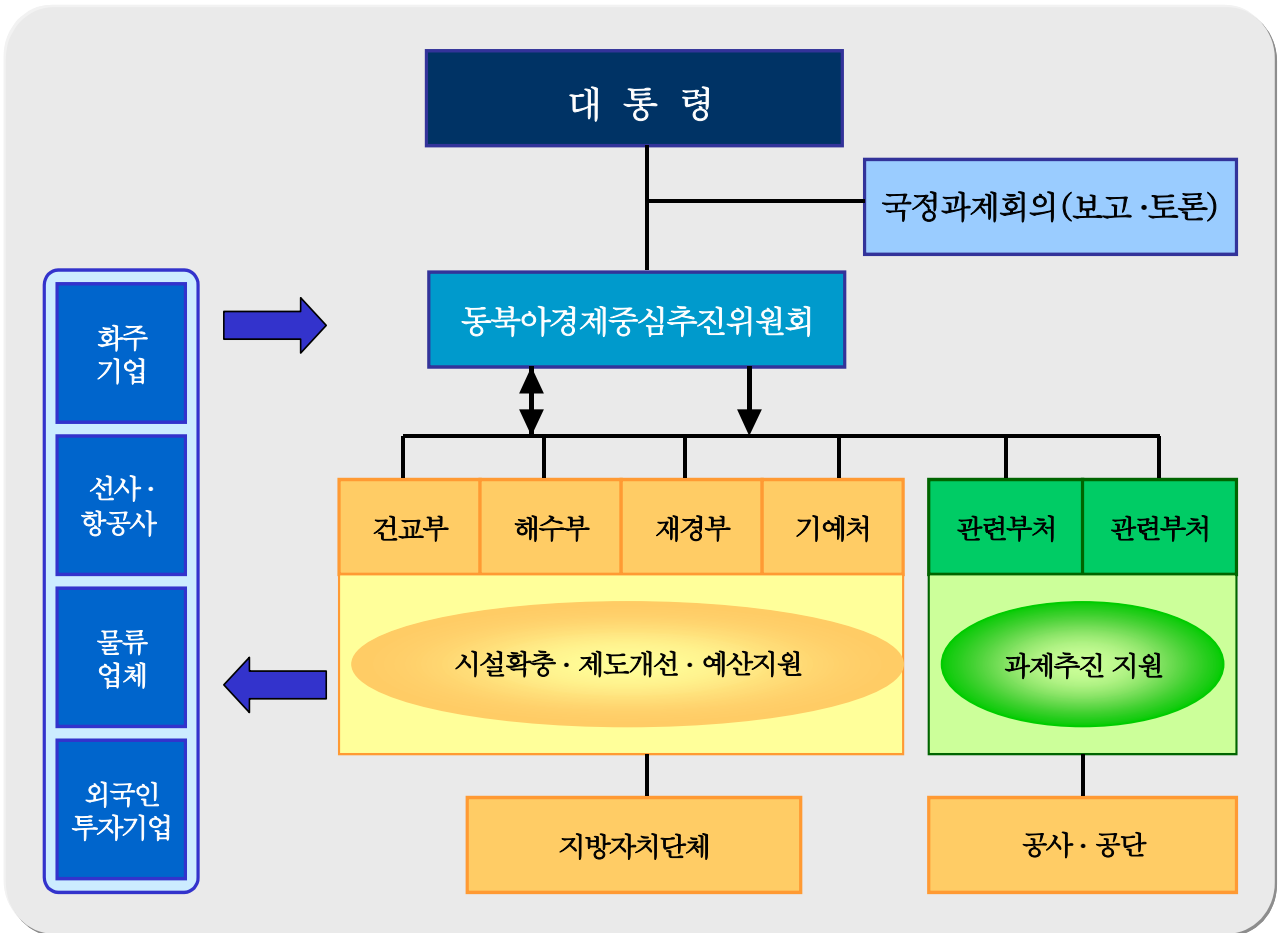
### 주요 추진일정

< 그림 12 > 주요 추진일정

		제도 정비기		초기시설 확보기		시설 확충기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물류 시설 확충	인천국제 공항			공항철도 1단계		공항화장2단계 시험운영	
	부산 신항	준설토 투기장		3선석 배후 2만평 도로 2.9km	3선석	1선석 도로 22.9km	10선석 배후 20만평
	광양항	8선석 운영 중	4선석	4선석 서측도로 11.4km		3선석 중마부두 2선석 배후 59만평	
제도 개선	투자배분 조정	교통시설 투자부분 조정					
	물류기업	화물차 개별등록제		우수 물류기업 인준제·적재물 배상보험 톤세제 법인세법 개정			
	거래 투명화	Cyber 거래 확산방안 마련		인센티브 제고			
	물류인력	산·학·연 교육 프로그램				물류전문 대학원 항만기능 대학	
	국제무역 지원제도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전략 마련		IR 등 활동 착수			
		선진통관제도 도입(월별납부제, 자율심사제 등)		국제 특송업체 유치			
					물류거점주체별 금융·보험 정보망 연계		
	동북아 철도망	동북아 철도망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 동북아 철도 협의회 구성					

추진체계

< 그림 13 > 추진체계





## IV.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중심지로의 도약

1. 금융중심의 정의 및 유형
2. 동북아 금융중심 추진배경
3. 동북아 금융중심 비전과 전략
4.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체계

## 1. 금융중심의 정의 및 유형

금융중심, 금융센터, 또는 금융허브란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 사이를 연결하여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담당하는 중심지로서, 다수의 금융기관이 집중되어 있고 금융거래의 중개 및 결제가 대량으로 이뤄지는 곳이다.

국제금융센터는 국내외 금융기관의 참여 여부와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글로벌금융센터는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국제금융거래의 중심지로서, 런던과 뉴욕이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특화금융센터는, 국내외 금융기관이 주로 특정 금융부문에 치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Private banking 중심의 취리히와 선물거래 중심의 시카고를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역외금융센터는 외국금융기관 위주로 비교적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런던의 배후 기지 역할을 하는 더블린을 예로 들 수 있다. 넷째, 역외기장센터는 회사설립 및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외국금융기관이 조세회피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곳으로서, 케이만 군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홍콩과 싱가포르를 런던과 뉴욕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아시아 지역을 위주로 비교적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금융센터로서 첫째와 둘째 유형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동북아 금융중심 추진배경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외국금융기관이 일부 진출해 있지만, 주로 국내금융시장을 대상으로 거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제금융센터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조세회피처인 역외기장센터는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경영·생활환경과 금융시장의 발전 측면에서 글로벌금융센터는 물론 지역금융센터, 특화금융센터, 역외금융센터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기존의 국제금융센터와 비교하여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금융중심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신성장동력의 모색

첫째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제조업 부문의 수출을 중심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후발개도국의 추격이 가속화됨에 따라 경제발전전략을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세계의 공장’으로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성장동력의 모색이 절실한 형편이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첨단화와 더불어 금융·물류 등 서비스 부문을 육성함으로써 ‘중국충격(China Shock)’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금융산업은 실물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고도의 정보분석 능력을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향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산업 중의 하나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새로운 금융수요의 활용 가능

둘째는, 동북아 지역의 고령화, 구조조정, 경제개발 등에서 파생되는 금융수요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은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연기금 등 금융자산이 증가하고 있고, 한국에 이어 중국, 대만, 일본도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금융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또, 동북아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금융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동북아 금융중심의 추진은 이와 같은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을 담고 있다.

### 금융 선진화와 국제화 달성 필요

셋째는, 동북아 금융중심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금융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달성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개발연대 이후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정부 또는 산업자본 소유로 운영되면서 독립성과 전문성이 제약되어 왔다. 비록 경제위기 이후 금융부문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원칙에 따라 자금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금융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동북아 구상에서 금융중심의 추진이 핵심과제인 이유는, 금융부문의 선진화와 국제화가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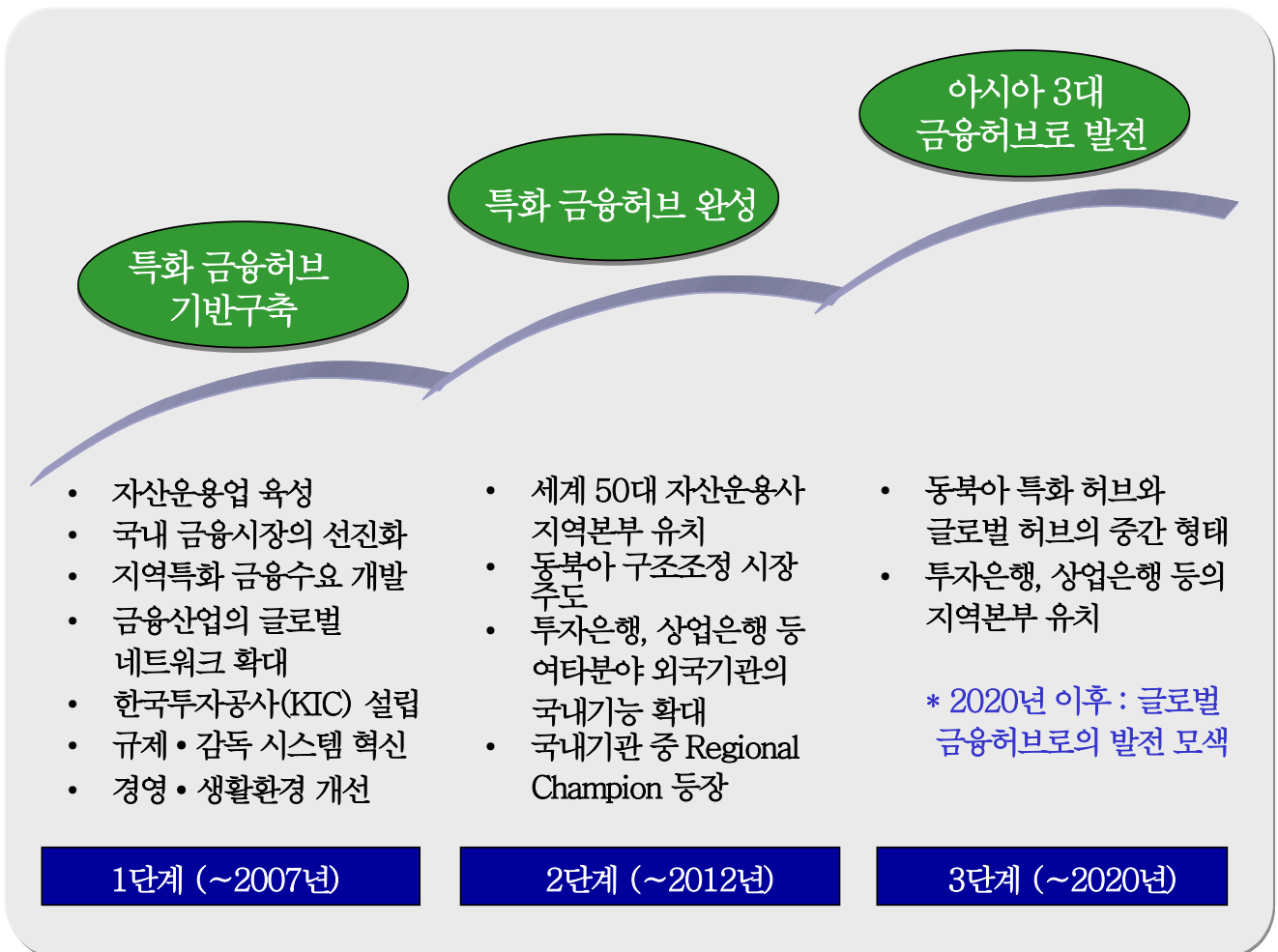
## 3. 동북아 금융중심 비전과 전략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역량으로는 단기간 내 글로벌 금융센터가 되기는 어려우며, 아시아 지역으로 국한한다고 해도 홍콩·싱가포르 등 기존의 지역금융센터를 완전히 대체하는 금융중심지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우선 동북아 지역 내에서 특정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금융센터로 도약한 후 홍콩·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지역금융센터로 위상을 확립하고 런던·뉴욕에 버금가는 금융중심지로의 발전을 모색하는 단계적 접근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개략적으로 1단계인 2007년까지 특화금융센터가 되기 위한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단계인 2012년까지 특화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정립한 후, 3단계인 2020년까지 홍콩·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하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우위, 세계 우수 금융기관 유치 효과, 향후 성장가능성, 금융산업 및 연관부문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업을 선도부문으로 선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금융중심 도약의 기폭제로 삼는 한편 국내 금융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고 동북아 역내 리더십을 확립해 나가며 경쟁력 있는 제도적 환경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 그림 14 > 금융중심 단계별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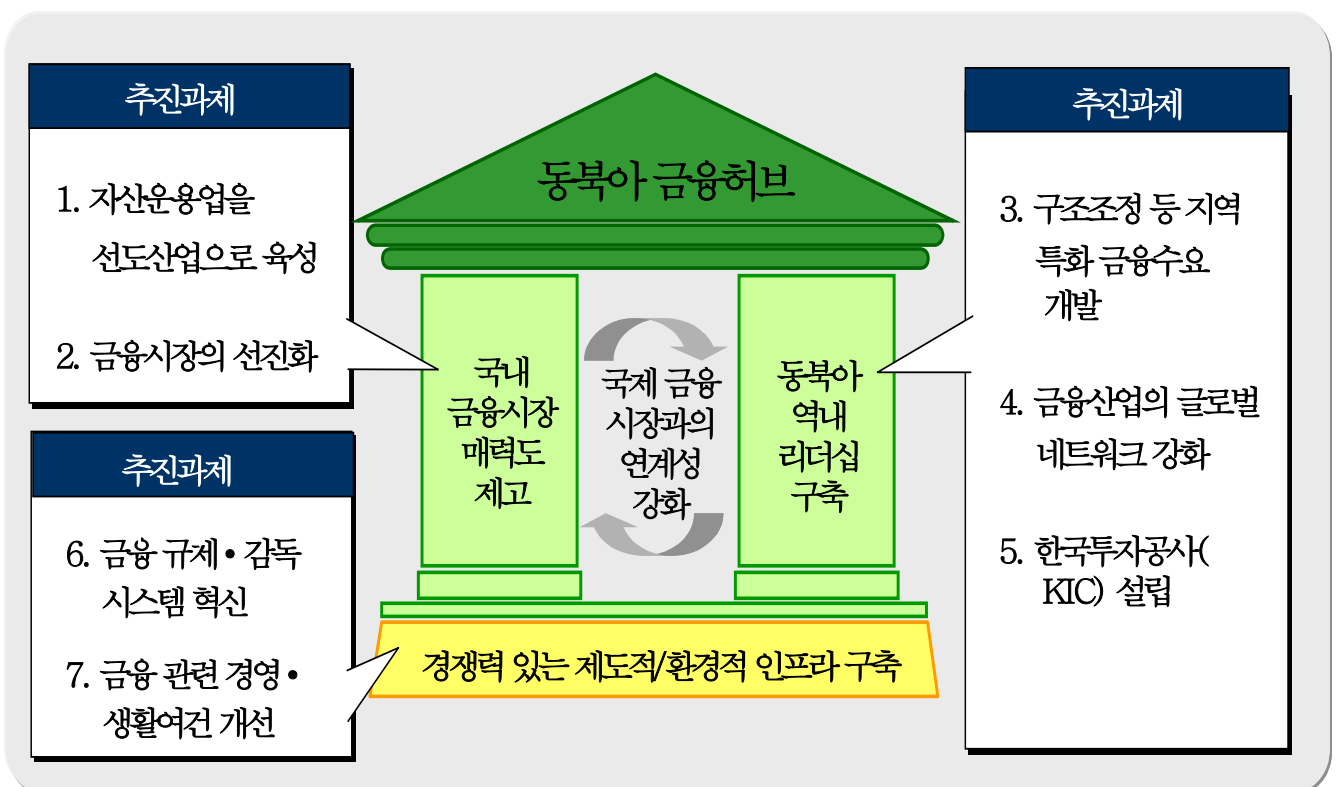
자산운용업을 선도 산업으로 선정한 것은 자산운용업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성장 유력분야로서, 국내 연기금·외환보유고 등 자산운용 수요가 풍부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외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용이하며 금융부문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지대하다는 장점을 고려한 것이다.

비록 현재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업이 그리 발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점에서는 일본·중국 등 주변국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가 국내외 금융기관을 활용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 4.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체계

국내 금융시장 매력도 제고, 동북아 역내 리더십 구축, 경쟁력 있는 제도적·환경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단계적으로 금융중심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 그림 15 >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7대 추진과제



## 선도부문으로 자산운용업 육성

자산운용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우선 연기금과 외환보유고의 경우 외부위탁 비율을 제고하거나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금융전문가에게 자산운용을 맡기고, 운용성과 평가 기간을 장기화하는 한편 운용성과와 위탁금액을 연계하는 등 운용 효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부실 투신사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완료하여 국내 자산운용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세계 유수의 자산운용사를 유치하여 시장 선진화를 촉진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진척됨에 따라 높은 금융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산운용에 전문성을 갖춘 세계 우수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를 배경으로 정부는 연기금 및 외환보유고의 자산운용권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해외 금융기관을 유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다. 더 나아가 자산운용상품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상품개발 규제와 관련해서는, 감독기관이 비표준 약관 상품에 대해 한정 또는 부적절 판정을 내릴 경우 명확한 사유를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규제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다.

## 금융시장의 선진화

자산운용업 등 금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주식·채권 등 개별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 관련 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우선 주식시장에서는 상장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투자자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고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회계제도 선진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하여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다. 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확대하여 ‘시장의 힘’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인 금융기관이 정부와 산업자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증권·선물 거래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별로 분리된 청산 및 결제 기능을 통합하고, 단일 거래소를 설립하여 매매기능을 통합할 계획이다.

채권시장에서는 10년 만기 국고채 비중을 확대(20%~30%)하고 10년을 초과하는 장기 국채도 발행하는 등 장기채권 시장을 육성하고 만기구조를 다양화하여 수익률 곡선(yield curve)이 형성되도록 할 것이다. 또,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채권 투자 시 위험 헤지수단을 강화하여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비거주자의 원화채권 발행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단, 이 경우 외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외환시장에서는 외화 유입을 촉진하고 유출을 억제하는 기존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투자 목적의 건전한 외화유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 안정장치와 무관한 외환 규제를 철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환거래법령을 네가티브 시스템(원칙 허용, 예외 불허)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구조조정 등 지역특화 금융수요 개발

경제개발과 구조조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는 특화된 금융수요가 상당히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동북아 지역에 진출할 유리한 위치에 있다. 정부는 경쟁우위가 있는 우리 금융기관이 동북아 금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우선 국내 물류허브 구축, 중국의 동북 3성 및 서부지역 개발, 극동러시아 및 북한의 경제개발에 따른 대규모 금융수요가 기대되므로, 국내 금융기관의 동북아 개발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중·일간 금융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물류허브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동북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여러 위험을 분석·완화하기 위한 조사팀을 산업은행 내에 설치하여 운영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 지역의 부실채권 규모가 약 1.2조 달러로 추정될 정도로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북아 지역 구조조정 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구조조정 전문기관과 투자펀드를 육성하여 동북아 지역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창출되는 사업기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계획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개발은행(NEADB)의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다.

### 금융산업의 국제 네트워크 강화

현재 우리나라에는 세계 우수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나 국제화된 국내 금융기관 등 금융시장을 선도할 세계적 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유치 및 선도적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금융의 국제화는 금융부문의 제도개혁을 정착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여 금융의 선진화와 상승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산업의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주한 외국기관과의

대화 채널을 확대하여 외국기관의 국내진출 및 영업확대를 저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 금융기관 유치 전담관을 신설하여 해외 재경관 및 국내 유관기관과 효율적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자발적 합병 및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국가간 금융협력 강화 및 신흥시장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화를 간접 지원할 것이다.

### 한국투자공사(KIC) 설립

외환보유고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싱가포르의 GIC를 벤치마크한 가칭 한국투자공사(KIC)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지급체제 안정성 보장을 위해 유동성 외환보유액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수익성 외환보유액은 전문기관인 한국투자공사에 맡겨 외환보유고 운용의 효율을 제고할 것이다.

한국투자공사의 투자자금은 초기에는 외환보유액 중 일부를 수익성 외환보유액으로 설정하여 조달하고 점진적으로 공공기금과 민간자산 등 조달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이와 같이 조달된 자금은 외화표시 자산에 주로 운용하되, 적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채권은 물론 주식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투자공사에는 자산위탁자인 정부와 한국은행이 대주주로 참여하되 최고 경영진은 엄격한 자격요건 및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전문가를 선임하고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립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할 것이다.

### 금융규제 및 감독 시스템 혁신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체감 자유도를 대폭 제고하기 위해 금융관련 규제를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일선 금융감독 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동시에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외환 투기에 대한 감독 규율을 확립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다.

규제체제의 개편은 두 단계로 나눠 우선 1단계에서 현행 규제의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2004년 내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2단계에서는 금융기관 영업활동 관련 규제부터 네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내외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규제체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것이다.

감독행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감독기관의 '서비스' 의무를 공표하도록 하고 시장참여자에게 자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시장·감독 당국간



정례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검사 업무를 시장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서면 위주의 상시 감시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금융기관 자체 검사매뉴얼 모범규준 마련 등 금융기관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 감독기관 등 여타 감독기관과의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감독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감독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 경영·생활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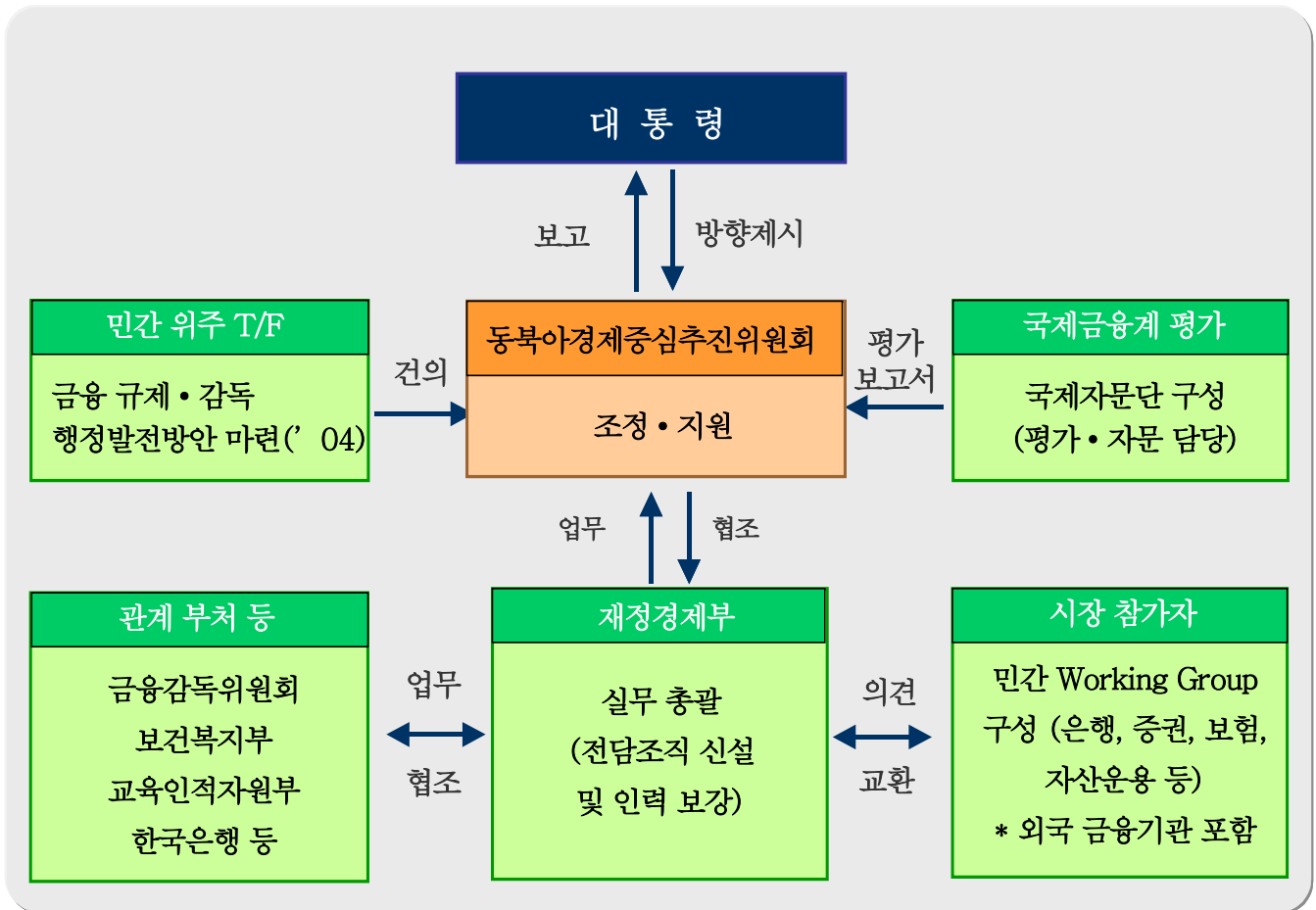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이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세계 각국의 금융전문가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과 생활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금융부문과 연관성이 높은 경영·생활환경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우선 소득세 혜택범위를 확대하고 국책은행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유능한 금융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 금융 관련 고급 교육과정을 설립하여 국내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금융허브에 걸맞는 경쟁국 수준 이상의 경영·생활인프라 구축으로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계획인데 재경부 주관 하에 노동, 조사, 금융·외환, 행정절차 등의 분야와 관련되어 수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개선 계획」과 산자부 주관 하에 교육, 의료, 교통, 주거, 출입국, 생활문화/통신 등 분야와 관련되어 수립되는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04~'08)」과 연계되어 추진될 것이다.

추진 체계

<그림 16> 추진 체계



< 그림 17 > 특화금융허브달성시(2012년)구체적 이미지

	현재	2012년
특화 부문의 역내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화된 부문이나 업종이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운용업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 내 리더십 구축</li> <li>• 동북아 구조조정 시장 주도</li> </ul>
국내 금융 시장의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시장 규모 : 아시아 5위</li> <li>• 채권시장 규모 : 아시아 2위</li> <li>• 자본 효율성 : 세계 20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시장 규모 : 아시아 2~3위</li> <li>• 채권시장 규모 : 아시아 2위</li> <li>• 자본 효율성 : 세계 10위</li> </ul>
국제금융시장과 연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 7개 (소규모)</li> <li>• 세계 50대 금융기관 진출 : 50%</li> <li>• Regional Champion 수준의 국내 금융기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50대 자산운용사 지역본부 유치</li> <li>• 세계 50대 금융기관 진출 : 80%</li> <li>• 상업은행, 생명보험 등 분야에서 Regional Champion 등장</li> </ul>
실물부문에의 기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즈니스 서비스업 GDP 비중 : 2.6%('00)</li> <li>• 1인당 국민소득 : 10,000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즈니스 서비스업 GDP 비중 : 9~10%(선진국 수준)</li> <li>• 1인당 국민소득 : 20,000불 달성에 기여</li> </ul>

## V. 창조형 국가혁신체제(NIS) 구축

1. 왜 창조형 국가혁신체제를 말하는가?
2.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의 성과와 한계
3. 창조형 국가혁신체제의 목표와 전략
4.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추진일정과 추진체계

## 1. 왜 창조형 국가혁신체제를 말하는가?

「창조형 국가혁신체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구축은 '새로운 제품의 구상과 상품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한다. 창조형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혁신기반을 조성하고, 개별 주체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매개가 되어 세계적 원천기술과 자본이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확대·재생산되는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창조형 국가혁신체제는 우리나라의 발전경로로 볼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는 대부분 선진기술의 도입 및 개량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진국의 원천기술 이전 기피와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 상황이 전개되면서 원천기술 및 신제품 개발능력의 확보는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적 과제가 되었다. 또한, 혁신주도형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혁신시스템의 정착은 우리나라가 투자주도형 단계에서 혁신주도형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마이클 포터의 주장과도 연결된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 및 조직자산의 수준을 볼 때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국가혁신체제의 구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이를 통한 신제품 개발과 같이 선진국이 장기간에 걸쳐 거쳤던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는 방법도 적절하다고 보여 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한 혁신역량을 활용해서 창조형 국가혁신체제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의 탐색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선진 R&D 센터의 유치 및 글로벌 R&D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해외 원천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창조형 국가혁신체제(NIS : National Innovation System) : 창조형 국가혁신체제란 새로운 제품의 구상과 상품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한다.

## 2.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의 성과와 한계

###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의 성과

지난 60년대에 산업화 진행과 함께 이를 지원할 혁신주체의 형성을 위해 KIST 등 공공연구기관이 설립되면서 국가혁신체제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40여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나타난 가장 뚜렷한 성과는 R&D 투자, 인력 등 투입의 급속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200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액은 16조원을 넘어섰으며, GDP 대비 R&D 투자는 2.92%를 차지해 경제규모 대비 R&D 투자비율은 세계 8위를 기록하였다.

양적인 R&D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주요 혁신주체들의 형성과 발전이 수반되었다. 기술혁신활동 주체인 기업과 대학, 연구소에 연구개발 활동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임계 규모가 확보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틀과 역량이 갖추어졌다. '60년대와 '70년대에는 정부출연연구소를 필두로 연구개발 활동이 이루어졌고, '80년대에는 기업, 그리고 '90년대에는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현재는 정부를 중심으로 혁신체제가 형성되고 운영되던 단계에서 민간 혁신주체들을 중심으로 혁신체제가 진화하고 자율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국가혁신체제의 양적·질적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대량생산제품 분야의 일부 품목에서 세계적 제품의 출현이라는 성과가 나타났다.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 소화, 흡수하여 제품을 개발·생산·수출하는 패턴을 유지하면서 반도체·휴대전화·TFT-LCD·자동차 등 대량생산제품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것이다. 재벌계 대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의 원천기술을 도입·소화하여 신속한 설비투자과 효과적 생산관리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다. 대량생산제품 분야에 이어서 복합시스템 제품분야에서도 시스템 통합의 성과가 나타났다. CDMA장비시스템 등의 경우 대형 공동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장비의 개발과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교환기나 이동통신시스템과 같은 복합시스템제품 분야에서 선진국 추격에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 정부출연연구소, 서비스 사업자, 제조업체 등이 공동연구개발방식을 통해 외국의 원천기술을 도입·소화하고, 다양한 부품들을 통합하여 시스템 제품을 개발·상용화한 것이다.

###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의 한계

국가혁신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선진국을 추격하고 리더그룹으로 부상하는 분야도 나타났고 어느 정도 접근한 분야도 생겨났다. 이들 각

분야에서의 성공은 우리나라에 기술개발시스템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체제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국가혁신체제를 구성하는 개별 혁신주체들은 그 동안 각개 약진식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혁신 주체간 연계가 취약하고 혁신주체들의 폐쇄성으로 인해 기술 확산 및 공유의 활성화가 지체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경우 선진국의 원천기술을 누가 빨리 들여와서 상품화하느냐가 경쟁력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국내의 다른 혁신주체들과는 협력할 필요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업계 주도의 기업간 협력 및 산·학·연 협력이 매우 취약하다. 재벌계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폐쇄적인 기업구조를 유지하여 기업간 협력이 제약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벤처기업간의 관계도 협력적이고 상호작용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구조보다는 위계적 구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업종별 협회의 경우도 그 동안 기업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일보다는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 동안의 정부정책도 공공부문을 통해 산·학·연 협력과 기업간 협력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민간부문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소홀하였다.

셋째, 이제까지 연구개발과 같은 혁신사업 등 대부분의 사업들은 개별 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관련 부처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처간 협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업이 있을 경우 부처 이기주의 등 여러 이유에서 개별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효율적으로 통합·조정하지 못해 시너지효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 3. 창조형 국가혁신체제의 목표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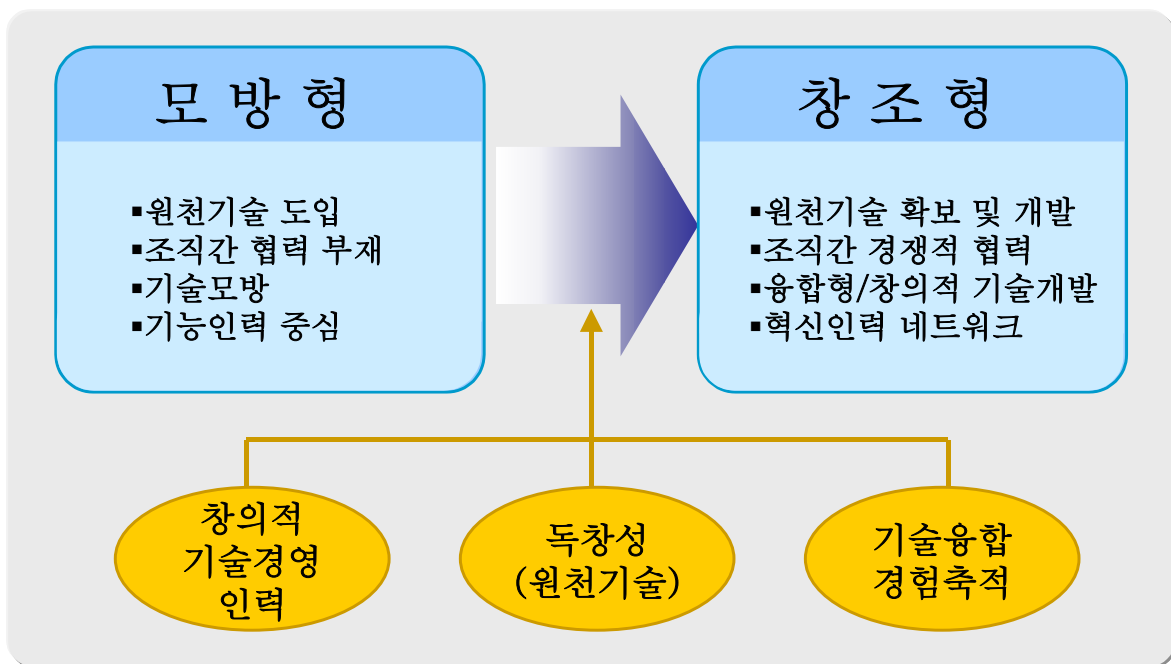
#### 추진목표

#### ① 모방형에서 창조형 국가혁신체제로의 전환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의 발전방향은 신제품 설계 및 개발능력에 기초한 창조형 국가혁신체제의 구축이다.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과 독창성의 확대, 그리고 기술융합경험의 축적 등을 통해 모방형에서 창조형으로 국가혁신체제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다. 창조형 국가혁신체제의 구축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해외 원천기술의 유입 및 결합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주력기간산업의 기술집약화’와 ‘신기술산업의 지속적 창출’을 통한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동북아의 ‘열린 지역주의’를 실현하는데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적 토대가 갖추어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쟁우위를 기초로 역외의 자본과 지식이 동북아지역으로 유입됨으로써 우리의 성장과 함께 동북아 전체의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그림 18 > 국가혁신체제의 발전방향



②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국가혁신체제 전환

창조형 국가혁신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혁신클러스터를 축소된 형태의 국가혁신체제(reduced-NIS)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가혁신체제를 강화하는 전략은 이미 OECD의 2001년도 보고서 ‘혁신클러스터: 국가혁신체제의 추동력(Innovative Clusters: Drivers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에서 제안된 바 있다.

창조형 국가혁신체제로의 효과적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잠재력과 특성에 기초한 한국형 혁신클러스터를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형 혁신클러스터는 민간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수요를 적극 반영하되, 중앙 및 지방정부의 협력적 지원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담보하는 형태로 추진될 것이다. 특히 민간 부문의 참여는 산업화와 정보화 과정을 거치면서 축적된 민간 대기업의 핵심역량과



벤처기업의 역동성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혁신클러스터의 지속적 육성을 통해 대기업·벤처기업·외국기업·대학·연구소 및 사용자가 참여하는 개방형 기술혁신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방적 환경에서 혁신주체들이 효과적으로 지식을 창출하고 확산함으로써 원천기술의 개발이 촉진되는 창조형 국가혁신체제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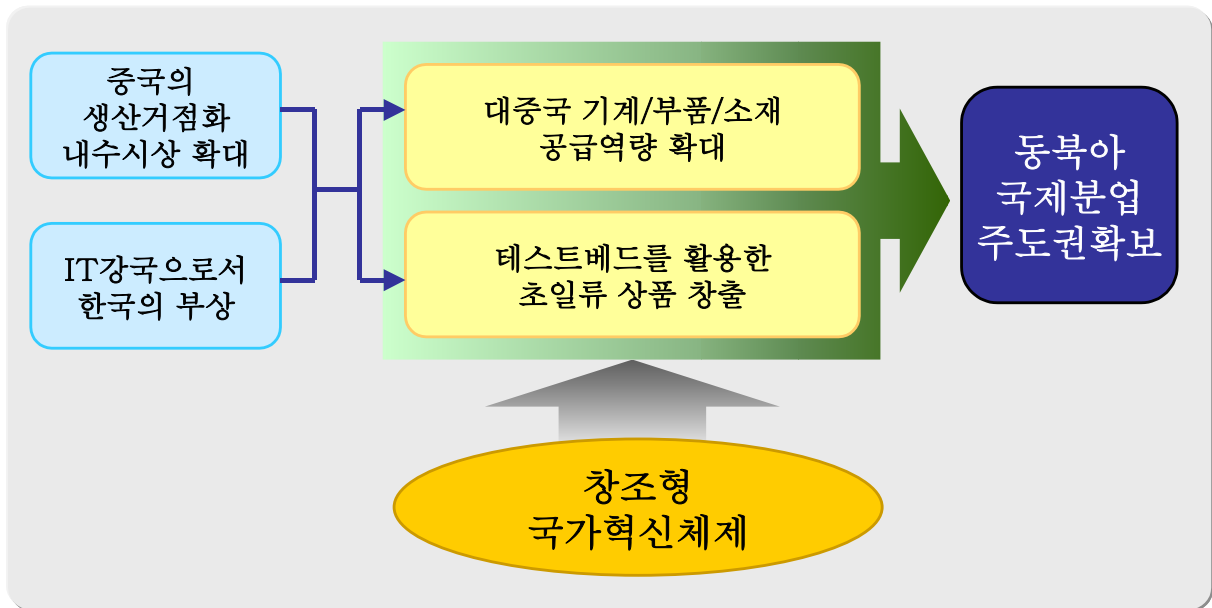
혁신클러스터는 “전·후방 연계 관계에 있는 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등 지식생산조직 및 기업관련 협회 등 연계/지원기관의 집적과 네트워킹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한 지역”을 의미하며, 미국, 영국, 독일 등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4대 전략

##### ① 전략적 차별화

동북아의 역동적 변화의 틀 속에서 우리나라를 전략적으로 차별화(strategic positioning)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국의 세계 공장화와 내수시장 확대, 그리고 IT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부상에 따른 기회와 위협요인은 전략적 차별화에 중요한 조건들이다. 대중국 기계·부품·소재 공급역량의 확대,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초일류 상품의 창출 등은 이러한 조건들을 검토했을 때 부각되는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창조형 국가혁신체제의 구축은 우리나라의 전략적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창조형 국가혁신체제에 기반한 전략적 차별화가 이루어지면,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를 통해 동북아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를 통한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진출은 새로운 국제분업구조가 동북아에 형성되고, 이를 토대로 역내 경쟁과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그림 19 > 전략적 차별화



### ② 기술융합을 통한 도약

다음으로, 우리의 핵심역량을 활용해서 창조형 국가혁신체제로 도약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혁신체제의 전환을 위해서 보통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접근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기초과학기술 연구를 토대로 획기적 발명과 발견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접근은 새로운 분야의 창출을 위해 기존 지식을 의도적으로 조합 및 융합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후자의 방식이 창조적인 기술혁신패턴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 및 정보화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자산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자산을 융합하여 신제품의 구상 및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기술융합이 가능한 영역은 다음과 같다.

- ㄱ. 주력기간산업과 신기술산업의 기술자산 융합
- ㄴ. 기업, 대학, 연구소들이 기술개발과정을 통해 축적한 기술자산의 융합
- ㄷ. 해외 및 국내 기업·연구소·대학간 기술융합

### ③ 시범사업의 추진과 확산

창조형 국가혁신체제로의 전환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하고, 다른 영역에 새로운 기술혁신패턴을 확산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혁신체제 전환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한 후 이들 사업들을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하고, 성공결과를 기초로 다른 영역에 새로운 기술혁신패턴을 확산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시범사업은 조직간 학습을 위한 개방적 문화 등 새로운 작업방식이 요구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을 넘어서 기업간 협력을 필요로 하거나 시장형성 등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사업이 우선 고려된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지난 2003년 7월 30일 국정과제회의에서 ‘동북아 신국제분업과 한국의 전략’을 발표하고, 텔레매틱스산업 육성을 전략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텔레매틱스산업의 육성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창조형 국가혁신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시범적 사업으로 소개되었다.

- ㄱ. 2대 주력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과 이동통신 등 IT산업간 협력을 통해 10년 뒤에도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산업을 확보함
- ㄴ. 개별기업 주도의 폐쇄형 R&D구조에서 개방형 R&D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우리나라 혁신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함
- ㄷ. 잘 짜여진 IT 하부구조와 역동적 소비시장(Test Bed) 등 우리의 핵심역량이 비즈니스모델의 토대임
- ㄹ. 우리나라에서의 성공을 토대로 동북아 및 세계시장, 특히 중국시장 진출로 확대 가능함

\* 텔레매틱스(Telematics) : 텔레매틱스는 IT 신성장 동력 산업의 종합결정체이며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확인 시스템(GPS)과 지리정보 시스템(GIS)을 자동차에 접목해 휴대폰이나 PDA, 자동차 내장 단말기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길을 안내하고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종합정보 시스템이다.

#### ④ 세계적인 인력 및 지식 네트워크의 형성

창조형 국가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인력 및 지식네트워크의 형성이 요구된다. 미국·EU·중국·일본 등의 세계적 수준의 대학과 인력 및 지식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략적 기술개발과 상업화를 주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혁신주체들과 보완적 관계에 있는 외국기업 및 연구소를 발굴하고,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또한 동북아 3국간 보완관계에 있는 산업부문에 필요한 핵심 기술인력 및 전문경영인 육성과 공동 연구프로젝트의 수행도 전략적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 중국의 산업화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나라를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거점으로 육성하게 되면 동북아의 국제분업구조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해외 기업 및 관련 연구소의 유치를 통한 새로운 지식원천의 발굴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최근 국내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그간 우리나라는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교두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양질의 기술인력과 기술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다국적기업에게 적절한 기업 환경을 조성해주고, 국내 기업 및 연구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내 혁신주체들의 참여가 활성화되면 다국적 기업과 연구소들은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개발관리 능력과 관련 지식을 공급해주는 원천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상호작용을 통해 기술도입과는 다른 형태의 암묵적 지식과 선진 기술개발방법론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4.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추진일정과 추진체계

##### 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추진일정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혁신클러스터 사업의 범위는 첫째, 수도권 혁신클러스터, 둘째, 경제자유구역 배후 클러스터, 셋째, 남북경협 거점 클러스터이다. 특히, 이들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역클러스터 사업과 유기적 연계를 확보하고자 한다. 혁신의 성과가 클러스터 간에 확산 및 공유되고 클러스터간 기능의 배분과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의 상암동 DMC(Digital Media City), 인천의 송도, 경기도의 판교 등 수도권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질 것이다.

혁신클러스터의 육성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계획적 관리방안의 수립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동북아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하 기술경영대학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기술경영대학원'은 지난 2003년 7월 30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창조형 국가혁신체제 사업의 핵심 주체로 그 필요성이 보고된 바 있다. '기술경영대학원'은 고급엔지니어 및 MBA 등 혁신인력 양성과 원천기술개발, 그리고 국제적 지식·인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혁신클러스터의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그림 20 > 주요 추진일정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략수립 및 제도개선	창조형 국가혁신체제 전략수립	→					
	수도권 계획적 관리방안 작성	→	→				
	동북아기술경영 전문대학원 수립	→	→	→	→	→	→
혁신 클러스터 사업	수도권 혁신클러스터	→	→	→	→	→	→
	경제자유구역	→	→	→	→	→	→
	남북경협 거점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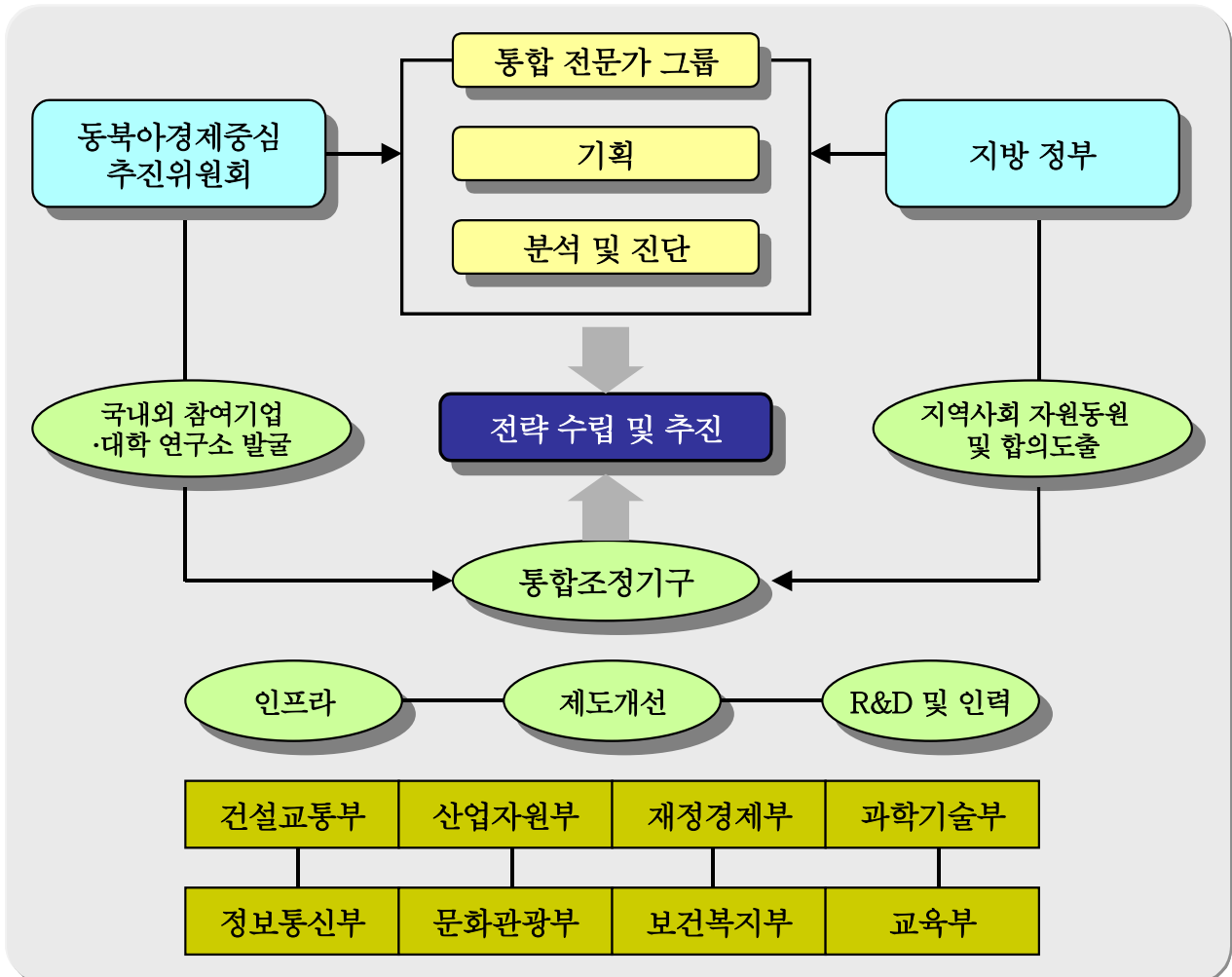
### 추진 체계

혁신클러스터 사업은 민간기업 주도로 사업의 기획 및 추진이 이루어진다. 민간주도의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는 연구개발·인력양성·인프라 구축·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적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0대 신성장동력 사업의 연계 및 조정을 통하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이 촉진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사업들은 대부분 융합적 특성상 다수 기업과 관련된 부처 및 지자체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해당사자들을 효과적으로 연계·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해져 통합조정기구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클러스터의 기획 및 추진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전략수립 및 추진에 있어서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중앙 및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전문가 그룹을 형성하여 분석 및 진단에 기초한 기획의 수립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지역전문가는 지역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중앙전문가는 문제해결 수단의 설계능력 등 지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로 구성될 것이다. 전략수립 과정에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할 국내외 기업 및 대학연구소 발굴 및 협약체결이 추진될 것이다. 그리고, 클러스터 기반의 지역혁신은 지역발전의 비전 및 전략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지방정부는 지역노조 등 이해관계자간 논의를 통한 합의도출과 역내외의 자원을 동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그림 21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체계



## VI. 전략적 외국인투자

1. 전략적 투자유치의 필요성
2. 전략적 외국인투자유치의 개념
3. 외국인투자유치 사업의 추진일정과 추진체계
4. 외국인투자유치 종합대책

## 1. 전략적 투자유치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을 시행하였다. 금융, 자본, 부동산, M&A시장 등을 대폭 개방하였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투자인센티브를 확대하였다. 1998년 4월과 1999년 10월에 각각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와 고충처리기구(외국인투자옴부즈만제도)를 설립하고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신고기준으로 지난 5년간('98~'02) 총 600억불을 유치하여 이전 35년간 246억불에 비해 괄목할 만한 증가가 있었다. 그러나 동 기간 중 외국인투자는 주로 공장신설형투자(green-field investment)보다는 국내기업의 합리화,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매물을 흡수하는 M&A형 투자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기술 제조업, R&D센터, 아시아지역본부 등 거점형 투자유치는 부진하였다.

< 표 2> 외국인투자유치 현황

	'98	'99	'00	'01	'02	'03.1~6
투자금액	89	155	152	113	91	26.6
-M&A	40	101	65	37	21	9.2
-공장신설형투자	49	54	87	76	70	17.4

(신고기준, 억불)

외환위기가 발생한 97년 이후 3년간 외환보유고 증가분 중 평균 30%를 외국인직접투자가 기여하였다. 그 동안 우리 국민의 노력으로 외환위기 당시 40억불에 불과하였던 외환보유고는 '03년도 11월말 현재 1,503억불에 이르고 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안정적 외자도입수단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는 정책수단으로서 충분히 그 소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유치를 다만 외환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국한시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외환위기를 벗어났다고 해서 더 이상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없거나 유치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해선 안된다. 외국인투자의 본질적 순기능은 외자도입액 자체보다는 기술력, 경영노하우를 갖춘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국내기업과 연계, 전후방연계효과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있다. 이 밖에 고용창출, 지역개발, 수출경쟁력강화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는 세계 각국이 경제현안을 해결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용하는 이유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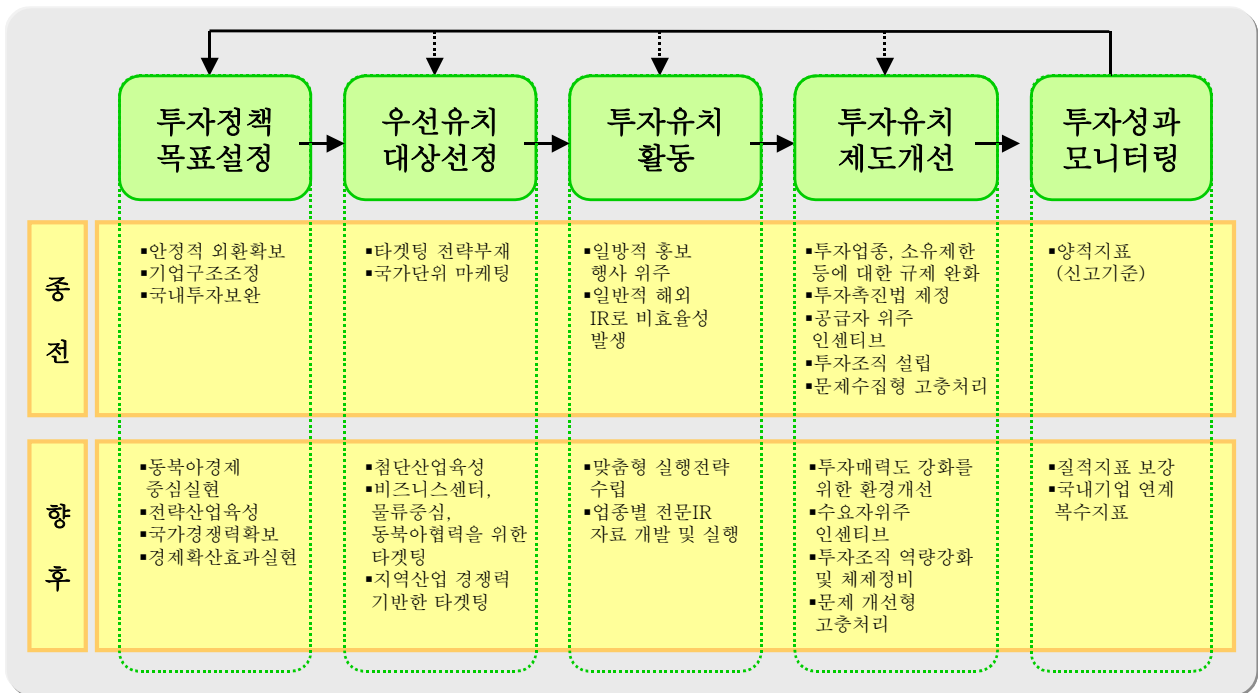


따라서 단순히 양적 유입만을 추구하여야 했던 위기적 상황과는 달리 이제부터 외국인투자 유치의 질적 순기능을 극대화 하는 전략적 투자유치가 필요하다.

## 2. 전략적 외국인투자유치의 개념

전략적 외국인투자유치는 현재 경제현안을 반영한 투자유치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유치대상 선정, 투자유치활동, 투자제도개선, 투자성과모니터링까지 각 단계를 일관적 체계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각 단계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림 22 > 전략적 외국인투자유치 개요



### 외국인투자 정책목표

외국인투자정책은 독립적인 단위정책이기보다는 상위의 경제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적 정책이 된다. 안정적인 외환확보,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 외국인투자 정책목표 달성 이후 새로운 경제현안을 외국인투자 정책목표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1999년 이후 실업률이 감소하자 「실업감소」를 위한 외국인투자유치에서 「낙후된 서부지역의 개발」 및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로 정책목표를 전환한 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투자를 활용할 수 있는 경제현안 분야로는 기존의 외국인투자 기조인 「첨단산업육성」 외에 동북아경제중심을 위한 「비즈니스센터화」, 「물류네트워크 강화」, 「동북아 SOC 건설 및 남북경협 지원」, 그리고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 비교우위 부분(지정학적 위치, 성장잠재력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여야 할 세부 외국인투자 정책목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신규첨단산업 개발유도 및 기존산업의 첨단화를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 ◆ 비즈니스센터를 위한 세계 대표적 다국적기업 및 아태지역본부 유치
- ◆ 물류중심을 위한 세계적 물류기업 및 지역물류센터 유치
- ◆ 남북경협 및 동북아협력네트워크 개발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 ◆ 지역의 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하는 지역개발형 외국인투자 유치

### 우선투자 유치대상

외국인투자정책목표가 정해지면 어떤 산업 또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여야 할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당초 선정한 투자정책목표의 실현, 효율적 투자유치활동 전개, 투자인센티브 등 투자유치 재원의 효과적 배분 등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유치할 대상 선정이 필요하다.

동북아경제중심의 상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스타급 다국적기업, 아시아지역본부, R&D센터 등의 유치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들 기업의 유치는 단순한 경제과급효과를 넘어 국가이미지와 신뢰성을 높이는데 촉매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전후방연관효과가 큰 중소기업형 투자도 집중유치대상에 포함된다. 정밀기계, 정밀화학, 부품소재, 운송기계부품 등은 오히려 중소기업이 주도하지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품목으로 선진국의 주력 수출업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들 품목을 어떻게 육성·발전시킬 것인지 여부가 곧 향후 성장동력으로서 주력업종을 존재시키기 위한 관건이 된다. 그 만큼 성장잠재력이 크며 또한 외국인투자의 효과적 활용도가 매우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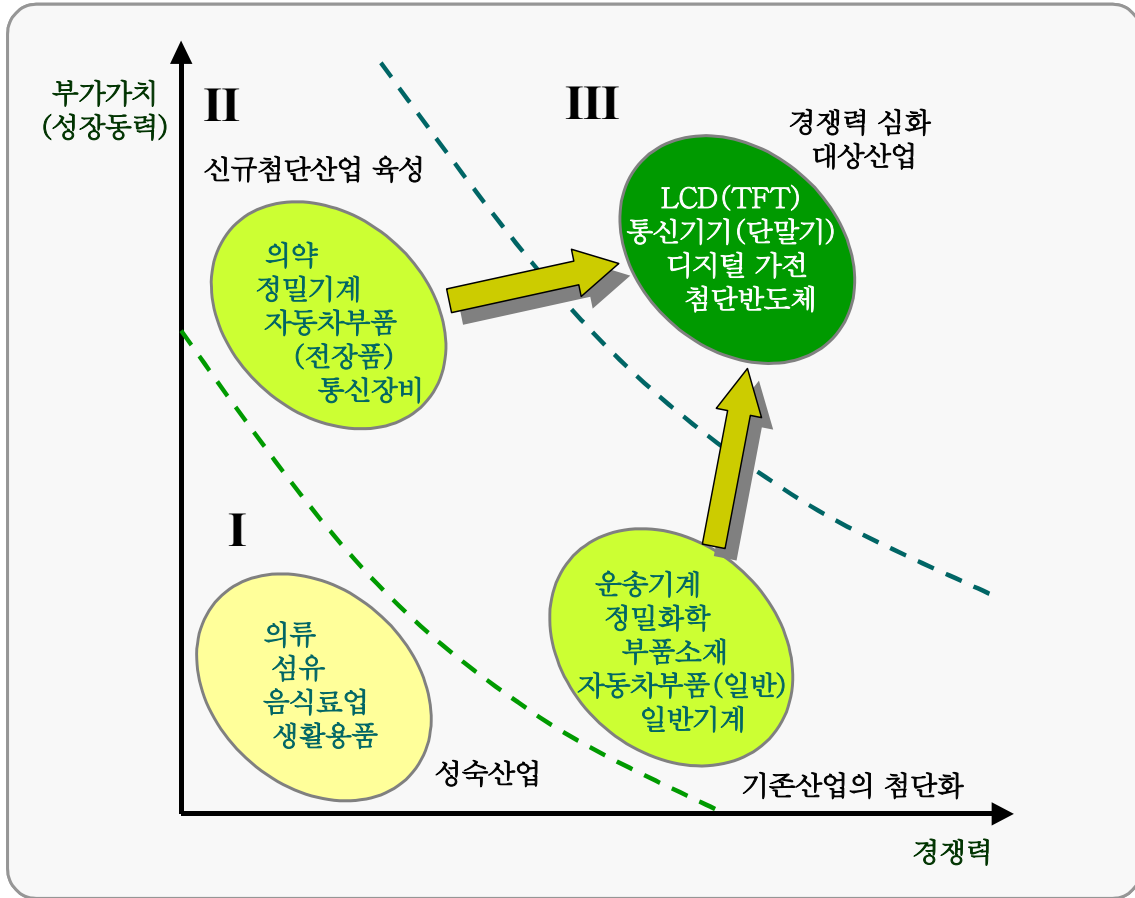
반면에 LCD, 통신장비, 디지털가전, 통신기기, 첨단반도체 등은 어느 정도 생산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성숙된 국내시장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업종은 외국인투자를 무분별하게 유치하여 국내 시장내 경쟁을 촉진시키기보다는 R&D센터, 디자인센터 등 새로운 기능을 유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가 유입되어야

한다. 생산효율성과 국내수요, 그리고 관련산업이 발달되어 있어 충분히 세계 유수의 R&D센터 입지로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 밖에 동북아 국가간 국제협력산업으로서 한중일간 자동차협업, 환적, 창고, 운수, 특송업체 유치를 통한 물류센터 및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음식료업, 생활용품 등 성숙산업의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분야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되어야 한다.

- ◆ 첨단산업 투자유치분야
  - 신규첨단산업육성: 정밀기계, 자동차부품(전장품), 통신장비
  - 기존산업첨단화: 운송기계, 정밀화학, 부품소재, 자동차부품(일반), 일반기계
  - 기능고급화: LCD, 통신기기, 디지털가전, 첨단반도체
- ◆ 비즈니스중심: 스타급 다국적기업, 다국적기업 아시아 거점, 금융기관
- ◆ 물류중심: 환적, 창고, 운수, 특송
- ◆ 남북협력: 남북간 교통, 물류 및 통신구축 연결 프로젝트, 개성공단 조성
- ◆ 동북아경제협력: 동북아 자동차산업 협업, 동북아 철강·화학산업의 합리화, 북한과 연계된 동북아 SOC 협업
- ◆ 전략서비스·문화관광: 전략적 사업지원서비스(기술, 마케팅, 회계 등), 전문가양성 국제교육, 종합휴양시설, 테마파크, 디지털애니메이션
- ◆ 지역발전(고용창출형): SOC, 의류, 섬유, 음식료업, 생활용품

< 그림 23 >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용 예



대상	타겟팅 정의	맞춤형 유치전략
그룹 I	성숙산업으로 조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창출, 지역개발 연계 인센티브</li> <li>지자체, 지역기업 중심 해외 IR</li> </ul>
그룹 II	미래성장동력으로 우선적 집중유치대상(첨단산업 신규개발, 기존산업첨단화를 위한 투자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이전, R&amp;D지원 연계 인센티브</li> <li>유럽의 선진 기계, 부품소재기술 이전을 위한 유럽기업대상 해외 IR</li> <li>외투기업에 대한 부품조달정보 제공</li> </ul>
그룹 III	경쟁력심화를 위한 선별적 투자유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사업의 기능심화를 유도 (생산→R&amp;D센터)</li> <li>인센티브보다는 공격적 해외 IR 실행</li> </ul>

## 투자유치활동 및 제도

### ① 미흡했던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그 동안 정부와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및 유관기관들의 투자유치활동 노력으로 외국인투자 유치가 확대될 수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투자유치경험 및 투자유치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할 때 유치활동을 담당할 담당자의 각별한 노력이 없었다면 이 만큼 성과를 이루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간의 투자유치활동은 정확한 타겟팅 산업에 따른 맞춤형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 투자유치대상 기업에 대하여 초청 투자상담회 개최, 해외설명회, 해외기업 방문 등을 통한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잠재투자가별로 구체적 실행계획(action plan) 수립하여 추진하는 데는 미흡하였다. 특히 해외 투자설명회(IR) 등에서 산업별, 업종별 전문적 홍보 소구점이 없이 일반적인 거시적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 ② 전략적이고 차별적인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

앞으로는 선정된 중점 유치 분야별 잠재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산업 및 경쟁현황, 필요 인센티브 정보제공, 적합한 입지정보 등을 담은 맞춤형 IR 자료를 작성하여 수요자에 맞는 차별적 유치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선도기업의 투자 담당자와 네트워킹을 형성하기 위해 접촉채널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단지 투자유치조직의 해외지사뿐만 아니라 교포 등 현지 유력인사와 대사관, 컨설팅 기관 등 현지 공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해 지원그룹을 만들어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범정부적으로 지원반을 구성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투자유치제도는 주로 투자업종개방, 소유제한 완화, 금융시장 개방 등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인센티브를 확충하였지만 주로 공급자적 시각에서 설계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는 미흡하였다. 이제는 무차별적인 양위주의 외국인투자유치에서 전략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차별적인 수단마련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산업경쟁력을 기반으로 투자유치 강점부분을 토대로 투자유치형별, 유치대상별 인센티브 및 제도 개선을 강구할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투자매력도 강화를 위한 외국인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나 탄력적 인센티브제도를 위한 현금보조금제도 도입 등은 그 예가 된다.

우리나라 사후관리제도는 국제기구인 세계은행에서도 모범사례로 다른 국가에 소개할 만큼 유명하다. 옴부즈만과 외국인 자지원센터내 고충처리팀은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처리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향후에는 단순히 애로사항 발굴·처리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건의, 추가투자 유도 등의 기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재의 투자유치체계 및 추진조직도 원스톱 서비스 강화를 위해 새롭게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 ◆ 우선유치대상별 맞춤 유치활동 전개
  - 맞춤형 해외홍보활동 추진
  - 해외마케팅기반 활성화
- ◆ 수요자 중심 인센티브, 사후관리제도, 추진체계 정비
  - 실효성 높은 인센티브제도로 개선
  - 문제사전 예방, 추가투자유도 등 적극적 사후관리로 전환
  - 강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 추진체계 마련

### 투자성과 모니터링

투자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은 애초 설정한 투자정책목표가 실현되었는가를 평가하고 투자유치 활동 시 잘못 추진된 부분을 수정케 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투자정책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관리의 한 단계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투자성과에 대한 지표관리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투자성과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외국인투자관련 통계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다. 다양한 통계자료와 지표는 국별로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방향과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투자정보 제공의 역할을 한다.

현재는 주로 신고기준으로 유치금액 및 건수 등 단순화된 지표로 외국인투자성과가 비교·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도착기준, GDP대비 외국인투자비중,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외국인투자비중 등 다양한 양적 지표를 추가하고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 수출, 고용, 인적자원 활용 정도, 창출 부가가치 등의 질적 지표를 보강하여 외국인투자 유치효과 점검 및 유치활동 방향 평가에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목표 중 하나인 외국인투자의 전후방연계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연계된 복수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측정지표로 외국인투자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기업 수가 과거 몇 개에서 현재 몇 개로 늘어났는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및 연구소간 공동연구성과(특허개발건수)가 몇 건인지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것은 효과적인 투자정책 관리지표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지표관리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 제도로써 정착하기 위해선 보다 체계적인 통계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 ◆ 투자성과 지표 다각화
  - 양적지표에 질적지표를 보강하여 관리
  - 경제확산효과 제고를 위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기업 파급효과 측정 관리
- ◆ 투자관련 통계개발 시스템 구축

### 3. 외국인투자유치 사업의 추진일정과 추진체계

#### 주요 추진 일정

참여정부가 출범된 2003년을 전략적 투자유치의 원년으로 하여 전략적 투자유치 정책방향 수립과 투자대상 타겟팅,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한다. 장기적으로 건전한 투자여건을 구축하기 위한 경영·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실행한다. 또한 투자유치활동 지원을 위해 국가홍보 및 해외 IR활동 전략을 수립하여 투자유치 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윈스톱 서비스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Invest Korea를 출범하고 프로젝트매니저(PM) 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투자전담기구 설립 등 투자유치체제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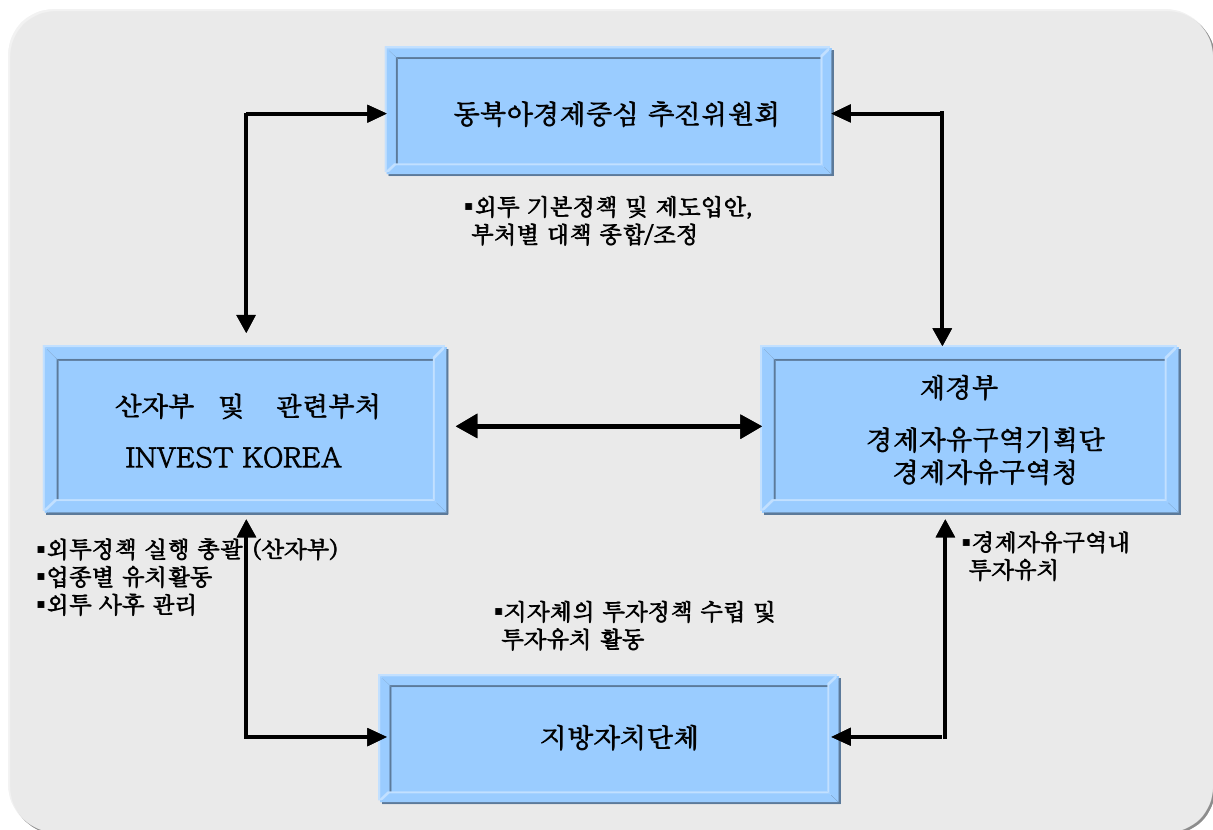
< 그림 24 > 주요 추진일정

과제	세부과제	2003	2004	2005	2006	2007
외자유치정책 방향 수립	기본계획 수립	종합대책 마련 → 부처별 실행계획 마련				
제도 및 환경개선	효율적 추진체제 구축	PM제 도입 등 윈스톱 서비스 체제 보강	PM체제실행 및 보완 투자전담체제 개선방안 수립			
	투자 인센티브제 개선	현금보조제 도입 → 입지/조세 지원제도 보완				
	경영 생활 환경 개선	실태조사 → 경영개선 3개년 생활개선 5개년 계획 수립		개선상황 점검 /	지속 개선	
종합적, 계획적 유치 활동	유치대상 타겟팅 전략 수립	타겟팅 분석틀 작성 → 타겟기업 선정 유치계획 수립	실행 및 보완			
	유치활동 지원	전략적 해외IR방안 수립		전략적 해외 IR	활동 지원	

### 추진 체계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정책의 최고 상위기관으로서 외국인투자정책의 기본 정책 및 제도의 수립과 부처별 대책을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산자부를 비롯한 해당산업의 주관부처는 업종별 외투유치활동을 추진하며 산자부는 외투정책을 총괄 관리한다. 기존 KOTRA내 설치된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를 새롭게 단장한 Invest Korea는 정부의 투자유치활동의 실질적 실무조직으로서 대내외 투자유치 서비스를 실행한다. 지역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하며 특히 경제자유구역 설치 취지에 맞는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활동은 재정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여 추진한다.

< 그림 25 > 외국인투자 유치 추진체계



### 4. 외국인투자유치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참여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 및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및 대책」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보고(2003. 9. 2)를 거쳐 다음과 같은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 경쟁국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국과의 투자유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인센티브를 경쟁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외국기업의 경영 및 외국인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입지의 무상제공 및 법인세 감면(5년간 100%, 2년간 50%)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며(제조업 : 5천만불→3천만불, 관광업 : 3천만불→2천만불, 물류업 : 3천만불→1천만불, R&D : 5백만불→5백만불), 제조업·관광업·물류업의 경우 1천만불 이상 투자에 대해서는 새로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조세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홍콩과 같이 17%의 단일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임대료의 75~100%가 감면되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확대 지정(충북 오창, 경남 진사)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조성한 공단(전국 82개)에 대해서도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 차액 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등 입지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2004년부터는 대규모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투자자와 정부간 협상에 의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현금보조제(Cash-Grant)를 도입하여 기존 인센티브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하기 편한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세·통관, 금융·외환, 증권·공정거래, 노사관계 등 기업의 경영환경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재정경제부 주관 하에 「경영환경 개선 3개년 계획」을 연내에 수립하여 추진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문제는 노동부·경찰청·검찰청 등에 노사분규 전담자를 지정하고, Invest Korea의 노무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한다. 한편 교육·의료·교통·주거·출입국·문화·여가 등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주관 하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5개년 계획」도 연내에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2005년까지 「Invest Korea Plaza」를 건립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육 및 외국인의 교육·주거·생활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 실효성 있는 One-Stop 서비스 체제 구축

외국인투자자에게 대해 실효성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 상담부터 인·허가 및 사업개시까지 투자의 전 과정을 전담요원이 책임지는 프로젝트 매니저(PM)제를 도입·운영하기로 하였다. PM은 투자자를 밀착 지원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대행 처리하며, 각 부처 및 지자체와 TF팀 등을 구성하여 전방위적 지원을 총괄 조정한다. 이를 위해 인·허가가 법정기한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인·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의제처리 규정」 적용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서비스를 전담해온 외국인투자 지원센터(KISC)는 「Invest Korea」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 조직의 편제를 기능별에서 산업별로 재편하여 전문가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산업별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파견을 증원·확대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실행한다.

### 외자유치활동 강화

그 동안 산업자원부 등 특정 부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외자유치활동은 대통령을 비롯한 전 부처 및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유치활동과 점검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대통령이 외자유치에 보다 관심을 갖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이를 위하여 다국적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대통령 명의 방한 초청(Red Carpet) 행사를 갖고, 북핵문제·노사문제 등 투자저해 요인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순방 시 유치대상 기업 관계자를 직접 면담하고, 외투기업의 기공식 등에 참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외자유치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특히 투자환경 개선내용을 점검하고 투자유치 성공사례를 발굴·격려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연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관계 부처별로 중점 유치 대상분야를 선정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한 후 유치실적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토록 하였으며, 투자유치에 공이 큰 민간기관, 지자체 공무원 및 Invest Korea 직원에게는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다국적 기업 및 유망 투자기업과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현지 전문가 채용, 전문 컨설팅사 활용 등 현지 인적 네트워크를 보강하면서 한국과 거래관계에 있는 잠재 투자기업의 지사장, 구매 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투자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내 네트워크 활용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투자기업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투자환경을 바로 알리는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 VII. 맺음말

새로운 동북아 시대의 도래를 맞아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의 하나로 한국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허브로 발전시키자는 동북아경제중심건설 추진사업이 시작되었다. 동북아경제중심건설 추진사업은 경제에서 출발하여 동북아에 ‘번영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번영에 기여하며, 나아가 ‘평화의 공동체’로 발전하여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공생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항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동북아경제중심이 되겠나? 우리가 어떻게 평화와 공동번영의 동북아를 구축하는데 주역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반신반의 하거나 불가능한 꿈으로 치부해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다. 또한 경제불황으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허황된 꿈을 제시하고 이를 모면하려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1917년 독일의 아데나워(Adenauer) 수상이 독일 작은 시의 시장으로 있을 때 유럽통합의 비전을 말하고 그 후 독일 수상이 되어 유럽연합을 실현해 나갔다고 한다. 아데나워 수상이 유럽통합의 구상을 발표했을 당시 유럽의 여건은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보다 훨씬 열악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세기가 지나지 않은 지금 그 꿈은 상당부분 현실로 우리 눈앞에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첫술에 배부르랴 라는 속담도 있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 과제는 이제 참여정부와 더불어 막 첫 삽질을 한 상태이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 사업을 위해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본 위원회는 정부부처와 함께 우리 국민과 우리 국가의 장래가 걸린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꿈이라고 생각하는 비전의 실현을 위해 차근차근 정책과제들을 준비하고 추진해 가고 있다.

우선 동북아 협력 구상은 유럽연합과 같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동북아시아에서 구현해 내려는 목표를 갖고 남북경협 거점개발, 남북·대륙철도 연계, 동북아 에너지 협력, 정보통신·과학기술 협력, 역내개발 자원조달 방안,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금융통화협력, 환경협력, 사회문화교류 등 모두 9가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 공동의 이익창출이 가능한 협력사업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정 요인을 제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물류중심지화를 위해서는 부산·광양항 및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항만과 공항으로 개발하고 배후지에는 국내외 주요기업의 물류센타를 유치하여 단순환적에서 벗어나 포장, 라벨링, 조립, 가공 등 고부가가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물류전문기업육성, 물류인력양성, 물류거래 투명화 및 정보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물류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를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내 금융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자산운용업을 선도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구조조정 등 동북아특화금융수요를 개발하고 세계적인 금융기관을 유치하고 우리 금융기관의 국제업무역량을 제고하여 2012년까지 특화금융허브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네 번째로 우리나라를 창조형 국가혁신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혁신클러스터와 경제자유구역의 배후 클러스터 그리고 남북경협 거점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세계적인 원천기술을 유입하고 확대·재생산되는 틀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선진 R&D 센터의 유치, 수도권 계획적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동북아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설치 등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의 순기능을 극대화 하는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유치대상, 인센티브, 입지제도, 사후관리, 성과지표 관리 등에 있어 일관된 정책기조 및 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경제중심 실현, 소득 2만불 시대 달성을 조속히 실현할 계획이다.

동북아경제중심추진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 구상은 동북아와 우리의 장래에 관한 원대한 계획이다. 동북아 구상은 20세기 산업화 기회를 놓쳐 찬란한 문화에도 불구하고 경제면에서 항상 서구제국의 뒤를 따라할 수 밖에 없었던 동북아가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거듭 나기 위한 열망이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 중국, 러시아의 틈바구니에서 주변국의 위치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던 한국이 동북아 역사의 새로운 장을 펼쳐 가는데 주역이 되기 위한 전략이다. 꿈이 없는 국민에게 희망이 없다. 꿈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국민에게 미래가 없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여는 힘은 국민에게 있다. 변해야 한다는 위기의식과 동북아 시대를 구현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 도출과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그러나 동북아 시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선 원대한 꿈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우리 국민 모두의 끈기와 인내심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웃 아시아인을 존중하고 포용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의식의 성숙 없이는 동북아 구상은 주변국으로부터 동감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 주변국의 아픔에 공감하고 더불어 살고자 하는 노력은 이들의 존재를 존중하는 자세에서 출발한다. 동북아 시대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경제력만으로 불가능하며 우리의 의식개혁을 통해 이웃으로부터 정신적·문화적으로 존중받게 될 때 가능하다. 대한민국이 유구한 역사와 고도의 문화로 인정받고, 투명한 제도와 합리적인 관행으로, 열린 사고와 포용력으로 인정받는 때가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진정으로 주도하는 때가 될 것이다.

\* 그림 및 표 안내

- < 그림 1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구상
- < 그림 2 > 동북아경제중심 구상도
- < 그림 3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기구표
- < 그림 4 > 동북아 협력구상도
- < 그림 5 > 동북아 시대 구현을 위한 청사진
- < 그림 6 > 남북철도(TKR)와 연계 가능한 대륙철도노선
- < 그림 7 > 물류중심의 개념도
- < 그림 8 > 물류중심의 비전
- < 그림 9 > 물류중심지로의 발전전략
- < 그림 10 > 중추공항의 비전
- < 그림 11 > 중추항만의 비전
- < 그림 12 > 주요 추진일정
- < 그림 13 > 추진체계
- < 그림 14 > 금융중심 단계별 비전
- < 그림 15 >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7대 추진과제
- < 그림 16 > 추진체계
- < 그림 17 > 특화 금융허브 달성시(2012년) 구체적 이미지
- < 그림 18 > 국가혁신체제의 발전방향
- < 그림 19 > 전략적 차별화
- < 그림 20 > 주요 추진일정
- < 그림 21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체계
- < 그림 22 > 전략적 외국인투자유치 개요
- < 그림 23 >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용 예
- < 그림 24 > 주요 추진일정
- < 그림 25 > 외국인투자 유치 추진체계

<표 1> 동북아 협력 사업

<표 2> 외국인투자유치 현황